

연구보고서 2022-01

OECD 등 주요 해외국가 건설제도 벤치마킹 연구(2차년도)

-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 및 향후 방향 -

2022.04

연구진

정 대 운 선임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 일 한 선임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 / 간 / 사

세계건설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의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등으로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으며, 이러한 건설투자 확대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6.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시장도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각국은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발주가 강화되는 등 국가별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연간 300억불 내외의 수주를 통해 해외 시공 매출액 상 세계 6위를 유지 중에 있으나, 국내 주요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51억불로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21년 306억불로 다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원인도 있으나, 무엇보다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건설 환경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건설 제도의 글로벌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의 건설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구축과 제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건설제도 정보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소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의 자체연구로 총 2개년도로 계획되었고, 2차년도 연구는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2년 4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유 병 권

요약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관련 제도(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등)는 과거 일본의 건설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옴에 따라 글로벌 건설환경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 및 한계가 제기됨.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등 주요 국가의 건설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1차년도)하고,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2차년도)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차년도 연구는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함.
- 먼저, 국내외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의 정보구축 및 제공사업을 조사함. 이를 위해 관련 문헌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정보구축 현황 및 제공사업을 분석함.
- 다음으로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을 파악함. 각각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국가별 건설제도 현황을 제도분야 및 연도별로 정리하여 분야별 정보구축 현황 및 제공사업 동향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함. 현재 국내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의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건설환경에서 국내 건설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함.
- 추가로 구축되는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함.

II.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외국법제정보,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 그리고 그밖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련 정보를 검토함.
- OVICE는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건설제도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나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타기관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임.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일부 OECD 국가를 포함한 총 78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세부적인 제도정보를 제공하나 건설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 건설제도만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그밖에 KIND는 OVICE와 연계한 주제별 정보, KOICA는 협력대상국의 개발협력 데이터, KOTRA는 국가별 시장정보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관별 조사방법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의 거점국가와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가 내부 담당자를 두어 조사되는 형태이며, “최신외국법제정보”는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임.

III.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

-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1차년도 과제와 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을 정리함.
- 1차년도 연구에서는 글로벌 건설제도를 총 9개 분야로 나누어 주요 5개국에 대한 건설제도를 현황을 분석함.
- OVICE는 15개 거점기관 중 OECD 3개국(미국, 터키, 콜롬비아)과 12개 개도국에 대한 세부적인 해외진출 종합정보와 함께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됨.
- OVICE의 건설제도는 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입찰제도를 포함한 조달제도와 건설안전

제도, 건설관련 법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건설제도와 PPP제도 등 미국의 주요 벤치마킹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OECD 11개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국가별 종합정보를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와 유사한 건설제도 분류체계(면허허가, 지사설치, 도급한도등급, 입찰, 보증, 시공관리, 부동산절차)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동향과 관련하여 OVICE의 '주제별 정보', 최신외국법제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함.

- OVICE '주제별 정보'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정보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두 기관의 경우에 관련 정보의 제공은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국내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정보를 등록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정보는 원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고 있음.
-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국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되는 정보 또는 자체적인 조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보로 한글로 제공되고 있음.
- 정보의 생성은 OVICE가 연 1회 정도의 주기로 생성하고, 최신외국법제정보는 매년 주제 선정에 따라 생성,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수시로 자료를 등록하는 형태임.
- 세 개의 기관 모두 건설제도의 세부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등록되어 있음.

IV.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과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을 토대로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글로벌 건설제도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재함.
- 둘째, 글로벌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국가들이 제공기관별로 상이함.
- 셋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국가별 정보의 구성과 내용이 다름.

- 넷째, 기관별로 다른 분류기준에 의해 글로벌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다섯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와 언어가 상이하다.
- 여섯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글로벌 정보는 세 가지의 형태(① 한글로 정리된 자료, ② 요약/목차 + 파일첨부, ③ 정보제공기관 링크)로 구분됨.
- 일곱째, 정보의 생성 및 갱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RICON의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 현황

- 2019년 12월부터 홈페이지의 '동향 & 이슈'를 통해 해외정보를 '정책'과 '시장', '칼럼'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 2022년 1월까지 '정책' 총 28건, '시장' 총 73건, '칼럼' 총 43건의 정보가 게시됨.
- '정책'과 '칼럼'은 다양한 주제와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정보는 일본과 영국, 베트남의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함.

○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과 RICON의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현황을 바탕으로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건설제도에 대한 글로벌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선진국 건설제도와 개도국 건설제도 정보의 이원화가 필요함.
- 셋째,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해야 함.
- 넷째,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정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다섯째, 전문건설업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사업이 도입되어야 함.
- 여섯째, 플랫폼 형태의 정보 제공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일곱째, RICON의 '해외 동향과 이슈'의 정보제공 분류체계의 개정이 필요함.

V. 결론

-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해 보완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의 구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해외건설협회의 담당자 면담조사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추가함.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정보제공 구조를 기반으로 OVICE와 유관기관의 정보를 추가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건설제도 정보는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도급한도/등급, PPP제도, 입찰/보증제도, 시공관리제도, 부동산절차/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서비스가 개통되면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와 건설기술연구원의 OVICE 등 중복되는 건설정보서비스는 폐지될 예정임.

-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함.
 - 정부나 연구기관은 글로벌 건설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건설제도를 선진화하는 정책을 마련 또는 제안할 수 있음.
 - 민간 기업이나 협회·조합은 선진국의 건설제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향후 건설제도의 변화를 준비하고 제도개정을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함.
 - 또한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추가로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과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의 확보와 이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이밖에도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은 건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	5
1.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별 현황	7
2.	소결	30
제3장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	35
1.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37
2.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동향	49
3.	소결	62
제4장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67
1.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	69
2.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76
제5장	결론	85
1.	주요 연구결과	87
2.	연구의 활용방안	89
	참고문헌	95

표목차

〈표 2-1〉 OVICE 주제별 정보의 ‘영업 및 기획’ 세부분류 및 내용	11
〈표 2-2〉 OVICE 주제별 정보의 ‘입찰 및 계약’ 세부분류 및 내용	12
〈표 2-3〉 OVICE 주제별 정보의 ‘조사 및 설계’ 세부분류 및 내용	12
〈표 2-4〉 OVICE 주제별 정보의 ‘사업관리’ 세부분류 및 내용	12
〈표 2-5〉 OVICE 주제별 정보의 ‘공통일반’ 세부분류 및 내용	13
〈표 2-6〉 해외건설협회의 주요사업	14
〈표 2-7〉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의 ‘국별환경’의 정보분류	15
〈표 2-8〉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의 ‘국별환경’의 세부정보 분류체계	16
〈표 2-9〉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의 ‘국별환경’ 정보제공 국가	17
〈표 2-10〉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서비스 제공 국가	20
〈표 2-11〉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정보구분 연혁	22
〈표 2-12〉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연도별 정보제공 현황	23
〈표 2-13〉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맞춤형 법제정보’ 및 ‘외국법제동향’ 정보개요 예시	23
〈표 2-14〉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해외 건설시장’ 정보제공 목차	25
〈표 2-15〉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건설경제리포트」 제71권 제3장 목차	26
〈표 2-16〉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별 비교	33
〈표 3-1〉 1차년도 연구의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 및 조사 국가	37
〈표 3-2〉 주요 5개 국가의 9개 분야 건설제도	41
〈표 3-3〉 OVICE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의 ‘핵심정보 활용안내’ 정보구성 체계	43
〈표 3-4〉 OVICE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의 ‘연방정부/민간기구 Indicator’ 정보구성 체계	44
〈표 3-5〉 OVICE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의 ‘연방정부(미국) 조달시스템’의 첨부된 자료정보	44
〈표 3-6〉 OVICE ‘해외진출 가이드북(베트남편)’의 ‘건설·ENG 관련 제도/법규’ 정보구성 체계	45
〈표 3-7〉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국별환경’에서 제공하는 영국의 ‘건설업제도’의 정보내용	47
〈표 3-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국별환경’에서 제공하는 캐나다의 ‘건설업제도’의 정보내용	47

〈표 3-9〉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국별환경’에서 제공하는 칠레의 ‘건설업제도’의 정보내용	48
〈표 3-10〉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폴란드)	49
〈표 3-11〉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터키)	50
〈표 3-12〉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멕시코)	51
〈표 3-13〉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칠레)	52
〈표 3-14〉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콜롬비아)	52
〈표 3-15〉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미국)	53
〈표 3-16〉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연도별 주제(2007~2008년도)	54
〈표 3-17〉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연도별 주제(2009~2011년도)	55
〈표 3-18〉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연도별 주제(2012~2017년도)	56
〈표 3-19〉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연도별 주제(2018~2020년도)	57
〈표 3-20〉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연도별·국가별 건수분석	58
〈표 3-21〉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연도별·제공형태별 건수분석	59
〈표 3-22〉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주요 키워드 분석	60
〈표 3-23〉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의 건설관련 법률정보(OECD 가입국 중 중점관리대상국가)	61
〈표 3-24〉 주요기관의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63
〈표 3-25〉 주요기관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동향	65
〈표 4-1〉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	75
〈표 4-2〉 RICON 홈페이지 ‘동향 & 이슈’의 해외 ‘정책’ 정보	77
〈표 4-3〉 RICON 홈페이지 ‘동향 & 이슈’의 해외 ‘시장’ 정보	78
〈표 4-4〉 RICON 홈페이지 ‘동향 & 이슈’의 해외 ‘칼럼’ 정보	80
〈표 4-5〉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이원화	82
〈표 4-6〉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84
〈표 5-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의 ‘지역/국가별 법규/제도 정보 제공’ 요구사항	92

그림목차

[그림 2-1] OVICE 서비스 개념도	8
[그림 2-2] OVICE 서비스 내용	9
[그림 2-3] OVICE 국가별 정보의 해외진출 가이드북(방글라데시편)	10
[그림 2-4] OVICE 국가별 정보의 미국정보 종합가이드	10
[그림 2-5] OVICE 주제별 정보의 정보서비스분류 현황	13
[그림 2-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연혁	18
[그림 2-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주요 서비스	19
[그림 2-8]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주요기능	21
[그림 2-9]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건설경제리포트」 표지 및 목차	26
[그림 2-10] KIND의 역할	27
[그림 2-11] 'KOICA 개발협력 오픈 데이터 포털'의 정보제공 분류	28
[그림 2-12]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의 정보제공 분류	30
[그림 4-1] RICON의 비전 추진절차	76
[그림 4-2] 전문건설업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절차	83
[그림 5-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의 구성	90
[그림 5-2]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의 목표 서비스	9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관련 제도(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등)는 과거 일본의 건설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오며 따라 글로벌 건설환경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 및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이 성숙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달청, 해외건설협회, KOICA 등 유관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는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주요 외국의 건설제도 조사·분석을 빈번하게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건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분야별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 건설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야별 건설제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등 주요 국가의 건설제도 비교·검토하여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2개년도 연구로 계획하여, 1차년도에는 OECD 등 주요 국가의 건설제도와 국내 건설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건설제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2차년도에 수행할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구축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른 1차년도 연구의 주요결과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해외 5개 국가에 대한 10대 분야의 건설제도를 도출하고, 국내 건설제도와 비교·진단하여 국내 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그리고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해외 5개 국가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며 10대 분야는 면허(등록)제도, 수행절제제도, 예산·원가제도, 발주제도, 선별·입찰제도, 보증제도, 낙찰제도, 지역·중소업체보호제도, 부패방지제도, 첨단·신기술제도이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제도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시 건설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주요 해외국가의 건설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건설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초연구과제의 성격으로 총 2개년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1차년도는 국내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건설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Framework를 구축하고, OECD 등 주요 해외국가에 대한 건설제도를 수집 및 분석·정리한 후 국내 건설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차년도에는 국내의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의 정보제공현황과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한다.

2차년도의 연구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의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의 정보구축 및 제공사업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정보구축 현황 및 제공사업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을 파악한다. 각각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국가별 건설제도 현황을 제도분야 및 연도별로 정리하여 건설제도의 각 분야별 정보구축 현황 및 제공사업 동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의 건설제도 정보구축 및 제공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건설환경에서 우리나라 건설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구축되는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하여 제안해 본다.

II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

1.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별 현황
2. 소결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

1.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별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과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외국법제정보” 그리고 일본의 “건설경제보고서”에 대한 기관개요와 정보제공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밖에 KIND와 KOICA, KOTRA에서 제공되는 글로벌 건설정보도 추가로 조사하였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일환으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가의 법·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담당부서는 건설산업진흥본부 건설정보실이다.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 Overseas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Engineering)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중 해외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거점국가에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해외진출가이드북 등을 개발하여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 8월 2개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처음 정보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총 15개 거점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페루, 터키, 케냐, 캄보디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파키스탄, 콜롬비아, 미국 등) 중심으로 각종 기술정보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정보는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정보 수집과 유관기관(해외건설협회, KOTRA, KOICA, MDB, EDCF 등)과의 정보 연계로 제공된다.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그림 2-1] OVICE 서비스 개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OVICE의 서비스 내용은 크게 시장 동향, 국가별 정보, 주제별 정보, 맞춤형 정보, 정보마당으로 구성된다. 시장동향에서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주요 산업동향, 기술동향, 발주동향 등의 동향정보와 최신 뉴스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정보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주요시장이 되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각종 건설엔지니어링 정보를 국가별로 제공한다. 주제별 정보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각종 건설엔지니어링 정보를 영업/기획, 입찰/계약, 조사/설계, 사업관리, 공통일반 등 32개 서비스 주제별로 분류하여 건설정보를 제공한다. 맞춤형 정보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해외건설ENG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ODA 발주기관 및 거점국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마당에서는 거점국가별 해외진출가이드북,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및 사례, 해외진출지원안내, 해외건설 사업관리양식/영문레터/실무 영어, 해외공사실무지침 등 각종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를 제공한다.

OVICE에서 제공되는 국가별 정보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 15개 거점국가에 한해서 맞춤형정보서비스, 해외진출가이드북과 미국정보 종합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거점국가별 해외진출 가이드북에서는 건설·ENG 시장 현황/전망, 건설·ENG 관련 제도/법규, 외국기업 진출 환경/동향, 노동 및 근로 환경, 건설·

	<p>시장 동향</p> <p>해외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주요 산업동향, 기술동향, 발주동향 등의 동향정보와 최신 뉴스정보를 제공</p>	<p>활용방안</p> <p>해외 시장의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수주 활동에 활용</p>
	<p>국가별 정보</p> <p>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주요시장이 되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각종 건설엔지니어링 정보를 국가별로 제공 (거점국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15개국)</p>	<p>활용방안</p> <p>국가별 환경에 맞춘 프로젝트 수주, 관리 및 수행에 활용</p>
	<p>주제별 정보</p> <p>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각종 건설엔지니어링 정보를 32개 서비스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 (영업/기획, 입찰/계약, 조사/설계, 사업관리, 공통일반 등)</p>	<p>활용방안</p> <p>해외건설엔지니어링 실무에 맞춘 프로젝트 수주, 관리 및 수행에 활용</p>
	<p>맞춤형 정보</p> <p>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해외건설ENG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ODA 발주기관 및 거점국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p>	<p>활용방안</p> <p>국가별/상황별 업무단계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수행 의사결정/업무지원 활용</p>
	<p>정보마당</p> <p>거점국가별 해외진출가이드북, 해외건설 계약/클레임 및 사례, 해외진출지원안내, 해외건설 사업관리양식/영문레터/실무영어, 해외공사실무지침 등 각종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 제공</p>	<p>활용방안</p> <p>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프로젝트 업무 수행에 활용</p>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그림 2-2] OVICE 서비스 내용

ENG 사업관행/진출전략을 포함한다. ‘건설·ENG 관련 제도/법규’는 건설·ENG 관련 제도(건설업면허 허가제도, 입찰제도, 보증제도 등),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건설·ENG 관련 세법(조세제도,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직·간접세), 금융환경 분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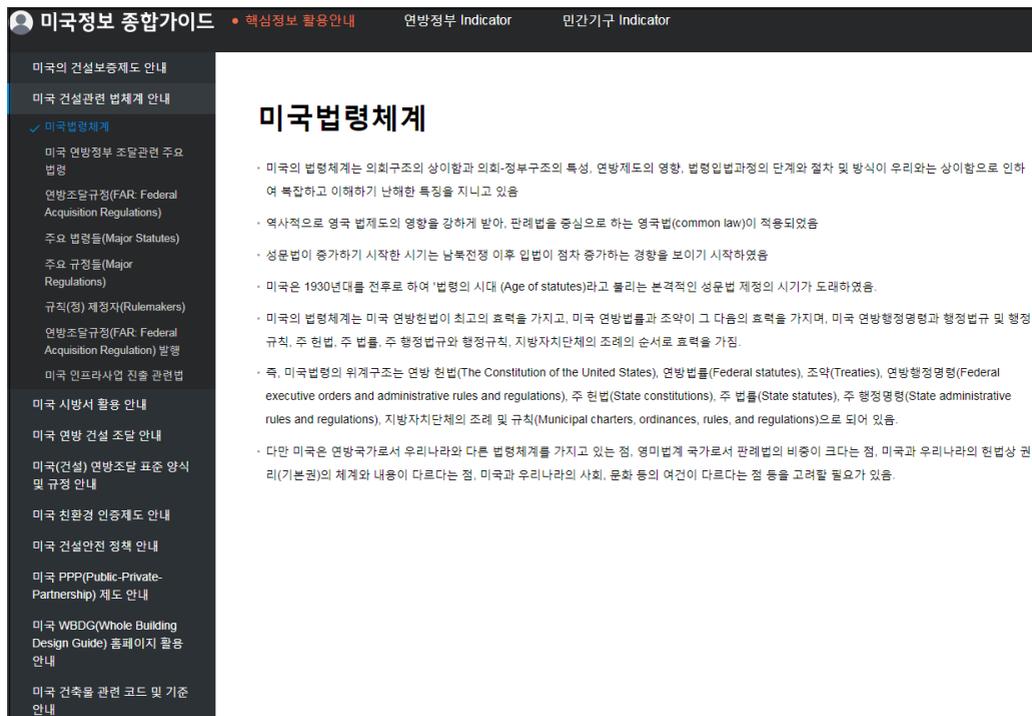
‘미국정보 종합가이드’는 핵심정보 활용안내, 연방정부 Indicator, 민간기구 Indicator로 크게 구분된다. ‘핵심정보 활용안내’에는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안내, 미국 건설관련 법체계 안내, 미국 지방서 활용 안내, 미국 연방 건설 조달 안내, 미국(건설) 연방조달 표준양식, 미국 친환경 인증제도 안내, 미국 건설안전 정책 안내, 미국 PPP제도 안내, 미국 WBDG 홈페이지 활용 안내, 미국 건축물 관련 코드 및 기준 안내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분류에 따라 세부분류가 구성되는데, ‘미국 건설관련 법체계 안내’에서는 미국법

령체계, 미국 연방정부 조달관련 주요 법령, 연방조달규정, 주요 법령들, 주요 규정들, 규칙(정) 제정자, 연방조달규정 발행, 미국 인프라사업 진출 관련법으로 세부 분류된다.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그림 2-3] OVICE 국가별 정보의 해외진출 가이드북(방글라데시편)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그림 2-4] OVICE 국가별 정보의 미국정보 종합가이드

주제별 정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영업/기획, 입찰/계약, 조사/설계, 사업관리, 공통일반의 대분류 하에 32개의 주제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영업 및 기

획'의 세부분류는 시장동향, 사회분화정치경제, 일반 법령 및 제도, 건설법령 및 제도, 사업개발계획, 건설인프라 현황 및 환경정보, 건설시장동향, 기술트렌드이다. 건설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반 법령 및 제도'는 건설 프로젝트 수행이나 수익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재무, 세무, 노무 등을 비롯한 일반 법령 및 제도를 담고 있다. '건설 법령 및 제도'는 건설법령/제도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수행에 필요한 투자, 조달, 인허가, 입찰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포함한다.

〈표 2-1〉 OVICE 주제별 정보의 '영업 및 기획' 세부분류 및 내용

구분	내용
일반시장동향	• 일반시장 동향 및 전망(건설시장 또는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뉴스 등)
사회분화정치경제	• 국가 일반현황 정보 및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현황정보 및 기초자료
일반 법령 및 제도	• 건설 프로젝트 수행이나 수익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재무, 세무, 노무 등을 비롯한 일반 법령 및 제도
건설 법령 및 제도	• 건설 법령/제도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수행에 필요한 투자, 조달, 인허가, 입찰 관련 법령 및 제도
사업개발계획	• 국가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정보
건설인프라 현황 및 환경정보	• 국가별 건설인프라 현황 및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건설 환경정보
건설시장동향	•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건설 및 프로젝트 수·발주 등 건설시장 관련 전망 및 News)
기술트렌드	• 건설기술개발 및 기술동향 정보, 현지건설기술 수준 및 적정기술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입찰 및 계약'의 세부분류는 입찰관련 정보, 입찰관련 문서, 보증 및 보험, 현장조사, 견적 및 물가자료, 계약 관리 정보이다. 건설제도와 관련해서는 '입찰관련 정보'와 '보증 및 보험', '계약 관리 정보'를 들 수 있다. '입찰관련 정보'에서는 각종 입찰 및 PQ 관련 정보로 국가별·발주처별 각종 입찰 및 PQ평가 관련 기준과 평가 방법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보증 및 보험'은 입찰보증, 보험 관련 정보와 자료, '계약 관리 정보'는 계약형태 및 공사유형별 계약관련 정보, 표준 계약서 및 각종 샘플자료를 제공한다.

그밖에 '조사 및 설계'의 세부분류는 지형/지질/기후정보, 조사보고서, 기본설계/계획 도서정보, 인허가정보, 프로젝트별 실시설계 도서정보이고, '사업관리'의 세부분류는 구매 조달, 일반관리, 발주처리관리, 공정 및 원가관리, 품질안전보건환경관리, 협력업체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이다. '공통일반'의 세부분류는 분쟁과 협의 및 클레임자료, 업체정보, 코드 및 기준, 지역/국가별 리스크현황, 성공 및 실패 사례, 기타일반으로 구성된다.

〈표 2-2〉 OVICE 주제별 정보의 ‘입찰 및 계약’ 세부분류 및 내용

구분	내용
입찰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PQ 관련 정보 (국가별, 발주처별 각종 입찰 및 PQ평가 관련 기준, 평가 방법 및 관련 정보)
입찰관련 문서	• 발주처별, 발주형태별 입찰관련 문서 및 자료
보증 및 보험	• 입찰보증, 보험관련 정보 및 자료
현장조사	• 입찰견적 준비를 위한 각종 보고서 및 현장조사 자료
견적 및 물가자료	• 입찰 견적 관련 자료 및 실적 자료 • 입찰 견적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각종 현지 물가현황 정보
계약 관리 정보	• 계약형태 및 공사유형별 계약관련 정보, 표준 계약서 및 각종 샘플자료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표 2-3〉 OVICE 주제별 정보의 ‘조사 및 설계’ 세부분류 및 내용

구분	내용
지형/지질/기후정보	• 국가별, 지역별 지형, 지질 및 기후 정보
조사보고서	• 연구, 기술 및 조사보고서
기본설계/계획 도서정보	• 계약형태 및 공사유형별 기본설계도서자료 및 각종 샘플자료
인허가정보	• 인허가 관련 정보
프로젝트별 실시설계 도서정보	• 계약형태별 공사유형별 실시설계도서 및 각종 샘플자료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표 2-4〉 OVICE 주제별 정보의 ‘사업관리’ 세부분류 및 내용

구분	내용
구매조달	• 각종 자재 관련 정보, 구매, 검사 및 촉진(Expediting) 정보 • 장비 조달 관련 정보 • 물류 운송 및 통관, 관세 관련 정보
일반관리	• 프로젝트 현장의 자재, 장비, 노무, 재무 등 일반관리 정보
발주처관리	• 발주처별 공사 관리 정보 및 각종문서 • 국가별 국제기구별 발주처 조직, 인사, 연락처, 각종 네트워크 정보
공정 및 원가관리	• 프로젝트별 공정표 사례 및 공정계획 관련 정보 • 프로젝트별 원가관리관련 정보 및 자료
품질안전보건환경관리	• 프로젝트별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건관리, 환경관리 관련 정보 및 자료
협력업체관리	• 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각종 정보 및 문서
운영 및 유지관리	• 프로젝트별 시운전 및 인도 관련 정보 및 문서 • 프로젝트별 운영 및 유지관리 자료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표 2-5〉 OVICE 주제별 정보의 ‘공통일반’ 세부분류 및 내용

구 분	내 용
분쟁과 협의 및 클레임자료	• 분쟁과 협의 조정 및 클레임 사례정보
업체정보	• 건설관련 각종 업체 세부 정보
코드 및 기준	• 국제, 국가, 지역별 표준 및 규격(Code)정보
지역, 국가별 리스크현황	• 지역별, 국가별 법, 제도, 정치, 환경 등 각종 리스크 현황 정보
성공 및 실패사례	• 해외진출 성공/실패 사례정보 및 보고서
기타일반	• 영문 Letter, 용어사전, 서식, 가이드 북 등 • 국가별 일반 통계 및 건설관련 통계(전문기관의 통계분석자료 포함)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OVICE 주제별 정보에서 제공되는 정보현황을 살펴보면, 정보서비스분류별로 매우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등록되어있다. ‘일반 법령 및 제도’는 1541건, ‘건설 법령 및 제도’는 968건으로 많은 수준의 정보량을 제공하고 있다.

영업 및 기획	시장동향 (372) 건설 법령 및 제도 (968) 건설시장동향 (2500)	사회문화정치경제 (410) 사업개발계획 (492) 기술트렌드 (161)	일반 법령 및 제도 (1541) 건설인프라 현황 및 환경정보 (556)
입찰 및 계약	입찰관련 정보 (697) 현장조사 (143)	입찰관련 문서 (878) 견적 및 물가자료 (174)	보증 및 보험 (194) 계약 관리 정보 (1128)
조사 및 설계	지형/지질/기후정보 (400) 인허가정보 (228)	조사보고서 (1596) 프로젝트별 실시설계 도서정보 (442)	기본설계/계획 도서정보 (320)
사업관리	일반관리 (701) 협력업체관리 (93) 운영 및 유지관리 (188)	발주처관리 (201) 공정 및 원가관리 (149)	품질안전보건환경관리 (445) 구매조달 (413)
공통일반	분쟁과 협의 및 클레임자료 (142) 지역, 국가별 리스크현황 (317)	업체정보 (215) 성공 및 실패사례 (169)	코드 및 기준 (849) 기타일반 (564)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그림 2-5〉 OVICE 주제별 정보의 정보서비스분류 현황

‘일반 법령 및 제도’와 ‘건설법령 및 제도’의 세부정보를 살펴보면, 다양한 발행처(KOTRA, 법제처, 국제청, 해당 국가의 기관, 연구원 및 학회 등)에서 발간된 국가별·분야별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문과 영문 또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원문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단, 제공되는 정보는 각각의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많은 자료가 정제되지 않고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OVICE 등에서 제공되는 많은 건설제도 정보를 재분류하여 건설제도 분류별 정보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협회(ICAK)는 1976년 11월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로 창립되어, 1977년 4월 해외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으로 등기되었다. 설립목적은 협회 회원의 품위를 보전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해외건설활동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국제수지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등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2-6〉 해외건설협회의 주요사업

-
-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
 -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회원의 품위유지와 복리증진
 -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 해외공사용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용자, 차관 및 보증의 알선
 -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 해외건설업을 위한 홍보 활동과 간행물의 발간
 - 해외건설업에 따른 각종 증명 및 확인업무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위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 기타 해외건설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cak.or.kr/>)

협회의 정보제공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주요 정보로는 프로젝트, 국별환경, 시장동향, 수수료통계, 진출지원 정보 등이다. 프로젝트 정보에는 외교부 제공정보, ODA 발주정보, MDB 발주정보, KSP 발주정보, GI-HUB 발주정보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국별환경 정보는 중동, 아시아, 북미·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재외공관현황, 해외주재관현황으로 분류된다. 시장정보도 국별환경의 지역분류와

동일하며, 가타지역과 인프라센터제공정보, 외교부제공정보로 분류된다. 수주통계는 요약 현황, 총괄계약현황, 전년대비현황, 수주형태별현황, 발주형태별현황, 연도별현황, 세부공종별현황, 순위별현황, 업종별현황, 그래픽차트로 제공된다. 진출지원에서는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신고, 해외공사상황통보, 현지법인설립신고, 시장개척지원, 현장훈련지원, 글로벌기술자양성, 보증/사업성평가, 해외실적확인, 기자재무환반출, 건설용어해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별환경’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하여 ‘건설업제도’와 ‘조세제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국별환경’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국가의 일반현황, 건설시장현황, 외국기업진출환경, 아국진출현황, 진출전망으로 분류된다. 일반현황은 국가개황, 정치, 경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건설시장현황은 건설시장개요, 건설업제도, 건설산업현황, 공사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기업진출환경은 투자환경, 조세제도, 금융, 보험, 노동·고용, 출입국관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아국진출현황은 국내 기업의 진출현황, 건설협력, 지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7〉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의 ‘국별환경’의 정보분류

일반현황	국가개황 우리나라와의 관계	정치	경제
건설시장현황	건설시장개요 공사 발주기관	건설업제도	건설산업현황
외국기업진출환경	투자환경 보험	조세제도 노동·고용	금융 출입국관리
아국진출현황	진출현황	건설협력	지사법인
진출전망	진출전망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cak.or.kr/>)

건설업제도와 관련된 세부정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별환경’에서 ‘건설시장현황’의 ‘건설업제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국별환경’정보의 국가별 세부정보는 〈표 2-9〉의 분류체계별로 정리되어 제공되며, 건설업제도는 다시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도급·한도·등급, 입찰제도, 보증제도, 시공관리제도, 부동산절차로 세부 분류된다. 추가로 조세 제도는 조세체계, 법인세,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조세, 이중과세방지 등으로 세부 분류되어 제공된다.

〈표 2-8〉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의 ‘국별환경’의 세부정보 분류체계

구분	세부 내용분류			
일반현황	국가개황			
	정치			
	경제			
	우리나라와의 관계			
건설시장현황	건설시장개요			
	건설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허가제도 • 지사설치제도 • 도급한도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제도 • 보증제도 • 시공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절차
	건설산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건설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건설업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업체진출
	공사 발주기관			
외국기업 진출환경	투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여건 • 투자신청·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투자현황 • 국제금융기관 	
	조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체계 •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 •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조세 • 이중과세방지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 •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금융조달 • 외환관리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관련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책임보험
	노동·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개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복리
	출입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사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수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체류
아국진출현황	진출현황			
	건설협력			
	지사법인			
진출전망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cak.or.kr/>)

이와 같이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단, 중동 18개국, 아시아 25개국, 북미·태평양 4개국, 유럽 8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중남미 9개국 등 총 78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제공되는 정보량은 차이가 크다. OECD 해당 국가는 터키,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로 11개 국가가 해당된다.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가별 건설업제도와 관련된 세부정보는 보고서 제3장의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2-9〉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의 ‘국별환경’ 정보제공 국가

<p>중동 (18개국)</p>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집트  오만(Oman)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
<p>아시아 (25개국)</p>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말련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  우즈베크  인니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  캄보디아  키르기즈  타지키  태국  튀르크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p>북미·태평양 (4개국)</p>	 괌  미국  캐나다  호주
<p>유럽 (8개국)</p>	 러시아  루마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조지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p>아프리카 (14개국)</p>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마다가스  모잠비크  민주콩고  세네갈  앙골라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메룬  케냐  코트디바르  탄자니아
<p>중남미 (9개국)</p>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Venezuela)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cak.or.kr/>)

3)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

한국법령정보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2012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제공사업과 생활법령정보 사업을, 2013년부터는 세계법제정보사업을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아 전자법령정보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법령정보원에서는 현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운영하며, 국가·지역·기구별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2004년 동북아 법령정보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2006년 세계법제정보센터로 확대·개편 및 웹사이트 구축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 언어권별 전담국가의 지정 및 법제정보 수집·제공이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 한국법령정보원으로 사업이 위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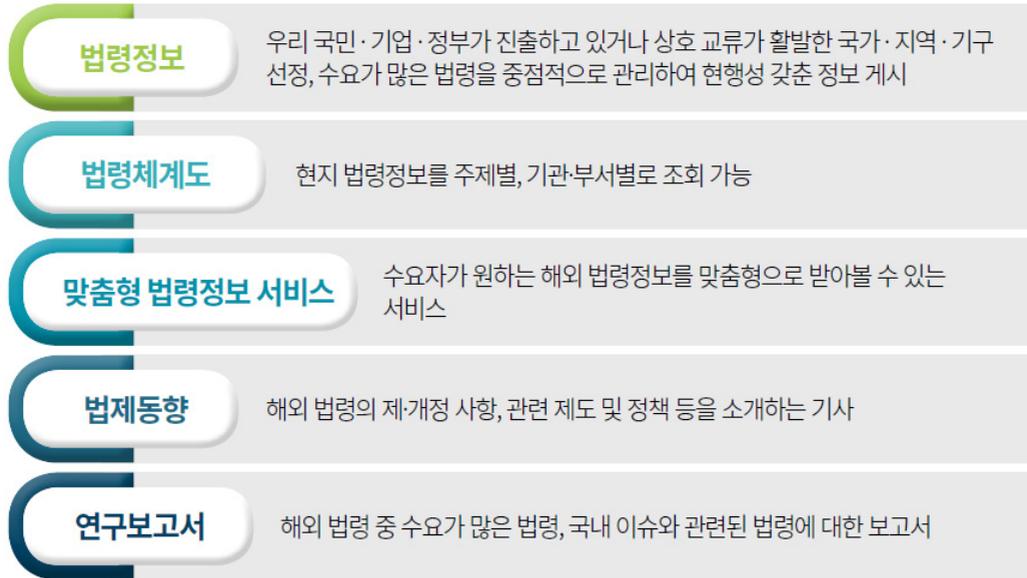


자료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2021).

[그림 2-6]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연혁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법제동향, 연구보고서로 구분된다. ‘법령정보’는 해외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점관리대상국가·지역·기구로 선정하고, 해당국가·지역·기구의 기업이나 국민의 수요가 많은 법령을 중점관리대상법령으로 선정하여 조사하고 수집하여 현행성 있는 최신 법령정보(원문·요약·번역 등)를 제공한다. ‘법령체계도’는 각국의 정부기관 및 해외 관보 등을 통하여 게시되거나 공포된 전자판 법령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주제 및 주무부서에 따라 카테고리화하여 제공한다.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는 우리 국민, 정부, 중소기업 등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청하도록 하여 필요한 해외법령정보를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줄이고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법제동향’은 해외법령 및 제도의 최신 제·개정 소식 및 관련 법령에 연관된 이슈를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마치

막으로 ‘연구보고서’는 해외법령 중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교류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많거나 이슈가 된 법령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 및 제공한다.



자료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2021).

[그림 2-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주요 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정보는 앞에서 분류된 주요 서비스별로 살펴볼 수 있다. ‘법령정보’에서는 먼저 지역과 국가·지역·기구를 선택하고 제목 또는 내용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찾는다. 찾은 자료는 목차수준의 간단한 개요와 출처가 설명되고 자료의 형태에 따라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또한 ‘주제별 법제’를 통해 헌법, 세제, 투자, 노동, 환경, 행정, FTA로 총 7개의 주제에 따라 국가별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검색절차는 ‘법령정보’와 동일하다. ‘법령체계도’에서도 먼저 지역과 국가를 선택하여 국가별 법령체계도¹⁾를 찾아볼 수 있다. 국가별 법령체계도는 원칙적으로 각 국가의 주요법률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주제별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관련 주제에 따르는 해당 국가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관련 부서 홈페이지를 제공하여, 관련부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해당국가의

1) 국가별 법령체계도는 각 국가별 법령정보를 주제·부서별 하위 카테고리로 이어지는 Tree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법령 정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어 현재 효력 있는 법령을 바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령을 제공하는 외국 홈페이지를 직접 안내하여, 관련 추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역, 국가지역·기구를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해당 국가의 연구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법령정보원의 자체 작성 또는 외부기관의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법제동향’에서도 지역, 국가지역·기구를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해당 국가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기사형식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제공되며, 이를 통해 국가별 최신 법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세계법제 뉴스레터’, ‘해외 출장보고서’를 통해 세계법제 동향 및 관련 연구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서비스 제공 국가는 중점관리대상국가지역·기구로 선정된 총 55개를 대상으로 한다. 총 9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동북아시아 5개, 러시아·중앙아시아 5개, 남아시아·태평양 14개, 중동 9개, 북미 2개, 중남미 6개, 유럽 10개, 아프리카 2개, 국제기구 2개가 포함된다. OECD 가입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로 총 16개국이다.

〈표 2-10〉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서비스 제공 국가

지역	중점관리대상국가지역·기구 (총55개)
동북아시아	중국,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 일본 (5개)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
남아시아 태평양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14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모로코, 알제리 (9개)
북미	미국, 캐나다 (2개)
중남미	멕시코 ,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6개)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10개)
아프리카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2개)
국제기구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2개)

자료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orld.moleg.go.kr/>).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가별 건설제도와 관련된 세부자료는 보고서 제 3장의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동향 분석’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은 1989년 12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의 공포로 설립되었고,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의 공포·시행으로 설립근거 법률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국내외 입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주요기능으로는 국내외 현정제도·법제와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입법데이터 관련 통계·평가 및 DB구축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용역 위탁 및 정부나 민간단체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국내외 입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lri.re.kr/>).

[그림 2-8]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주요기능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정보는 연구보고서, 학술지, 연속간행물,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외국법제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는 2007년에 시작하여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외국법제연구’로 구분되어 제공되다가 2011년에는 ‘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이 추가되었다. 2012년에는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Global Legal Issue’의 3가지 분류로 다시 변경되었고, 2013년에는 ‘Global Legal Issue’가 ‘비교법 현안분석’으로 다시 대체되었다. 2014년에는 ‘비교법 현안분석’이 ‘글로벌 현안분석’으로 변경되어 2015년까지 유지되다가 2016년에는 ‘글로벌 법제현안’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에는 ‘맞춤형 법제정보’만 발간되었다. 2018년 이후부터는 ‘맞춤형 법제정보’와 ‘외국법제동향’만 유지되어 2021년 현재까지 발간되고 있다.

〈표 2-11〉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정보구분 연혁

기간	정보구분
2007년 ~ 2010년 제2호	•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외국법제연구
2010년 제3호 ~ 2011년	•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 외국법제연구
2012년	•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Global Legal Issue
2013년	•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비교법 현안분석
2014년 ~ 2015년	•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글로벌 현안분석
2016년	•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글로벌 법제현안
2017년	• 맞춤형 법제정보
2018년 ~ 2021년	•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2018년 이후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연간 4~6개 호가 발행되고 있으며, 1개 호당 7~9건의 국별 정보가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1개 호당 ‘맞춤형 법제정보’가 2~7건, ‘외국법제동향’이 2~6건 정도이다. 1개 호당 평균 8건의 정보를 기준으로 ‘맞춤형 법제정보’와 ‘외국법제동향’의 정보 건수를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은 연당 6개호, 2020년은 5개호, 2021년은 4개호로 감소되었고, 호당 정보 건수도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주요 조사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나 베트남, 태국 등 개발도상국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의 제한은 없다. 조사대상은 의료, 제조, 건설, 주택, 국방, 금융, 보안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맞춤형 법제정보’의 경우에 외부 신청기관에 의해 주제가 선정되어 수행되고, ‘외국법제동향’은 자체적으로 주제가 선정된다. 조사방법은 주로 해당 국가의 학교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인력을 활용한다.

〈표 2-12〉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연도별 정보제공 현황

연도	발간 호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합계
2018년	제1호	4건	4건	8건
	제2호	4건	4건	8건
	제3호	4건	4건	8건
	제4호	4건	4건	8건
	제5호	4건	5건	9건
	제6호	7건	2건	9건
2019년	제1호	4건	4건	8건
	제2호	4건	4건	8건
	제3호	5건	3건	8건
	제4호	5건	3건	8건
	제5호	2건	6건	8건
	제6호	3건	5건	8건
2020년	제1호	3건	5건	8건
	제2호	3건	5건	8건
	제3호	3건	4건	7건
	제4호	3건	5건	8건
	제5호	2건	6건	8건
2021년	제1호	3건	4건	7건
	제2호	3건	4건	7건
	제3호	3건	5건	8건
	제4호	3건	4건	7건

〈표 2-13〉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맞춤형 법제정보’ 및 ‘외국법제동향’ 정보개요 예시

구분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주제	영국 상하수도 인프라 지원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일본의 「지역재생법」 주요 개정 내용
년/호	2019년 제4호	2020년 제3호
저자	이동준 영국 워릭대 창조산업학 박사과정	김잔디 일본 오사카대학교 초빙연구원
신청 기관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

‘최신외국법제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와 관련해서는 보고서 제3장의 ‘글로벌 건설 제도 정보제공 동향분석’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 “건설경제리포트”

일본 건설경제연구소는 1982년 9월 1일에 일본의 건설업보증회사 3사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의 형성과 건설산업의 진흥을 공헌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자본 정비 및 건설산업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가 주창해 아시아 컨스트럭트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외 국가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활동의 성과는 일본 경제와 공공 투자에 관한 정책 제언, 건설 투자 예측 등으로서 정리해, 일반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 건설투자·공공투자에 관한 조사연구, 건설산업·경영 재무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공공 조달·계약 보증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주택·도시문제·국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해외시장·국제비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발간물로는 건설경제리포트(일본 경제와 공공 투자)를 연 1회 발표하고, 건설 투자 전망(정부 건설투자, 민간 주택 투자, 민간 비주택 투자)을 연 4회, 주요 건설회사(연 매출 상위 약 40개 회사)의 결산 분석을 연 2회 발표한다. 또한 사회자본정비·건설산업·관련산업·국토정책 등 다분야의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원소식을 매월 발표한다.

해외정보와 관련해서는 2007년까지 23차에 걸쳐 해외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보고서 개요판을 게재하였으나 최근 홈페이지 개편 후 삭제되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내용이나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워싱턴DC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 건설경제 동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보고서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는 홈페이지에 해외 건설시장을 따로 구분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MENA²⁾ 지역의 건설투자 추이를 게재하고 있다. 2014년 이전 해외 건설 시장 자료는 「건설경제리포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2016년 이전까지는 연 2회, 2017년 이후부터는 연 1회가 게재된다.

또한 「건설경제리포트」에서는 해외 건설분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매년 주요 이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2021년(No. 73)에는 “건설기업의 새로운 해외사업 전개방식(PPP 관민 연계를 통해)”, 2020년(No. 72)은 “건설기업의 해외 전개 전략”과 “건설업의

2) MENA :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의 합성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속해 있다. MENA 지역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유동자금이 풍부하며 국가 위험이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처: NAVER 지식백과)

해외 진출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 등의 과제”였다. 특히, 2019년(No. 71)에서는 “국제 전개하는 건설관련 기업의 현황과 전략”과 “아프리카 건설시장과 일본기업의 사업전개”를 다루었고, “국제 전개하는 건설관련 기업의 현황과 전략”에서 “세계의 법체계와 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의 건설 경제 및 건설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1995년 11월에 본 연구소의 제창에 의해 시작한 Asia Construct Conference를 주관하고 있다. 본 컨퍼런스는 연 1회 개최되고 있어, 최근에는 제18회 회의는 2012년 10월 싱가포르, 제19회 회의는 2013년 11월 인도네시아, 제20회 회의는 2014년 11월 홍콩, 제21회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제22회 회의는 2017년 10월 한국, 제23회 회의는 2018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참여국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으로 총 9개국이다. 추가로 유럽에서는 Euro Construct Conference가 1975년부터 연 2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일본 건설경제연구소는 참관국으로 참여 중에 있다.

〈표 2-14〉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해외 건설시장’ 정보제공 목차

海外の建設市場 2021年5月	해외 건설시장 2021년 5월
1. 主要地域の建設投資 (生産額)	1. 주요지역 건설투자(생산액)
2. アメリカの名目建設投資の推移	2. 미국의 명목 건설 투자 추이
3. アメリカの住宅着工件数の推移	3. 미국 주택 착공 건수의 추이
4. アメリカの住宅抵当金利の推移	4. 미국 주택저당금리 추이
5. アメリカの公共投資の分野別推移	5. 미국 공공투자 분야별 추이
6. アメリカの建設関連指標の推移	6. 미국 건설 관련 지표의 추이
7. 欧州の実質GDP伸び率の推移	7. 유럽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8. 欧州の直近のGDPと建設投資 (生産額)	8. 유럽의 최근 GDP와 건설투자(생산액)
9. 欧州の名目建設投資 (生産額) の推移	9. 유럽의 명목건설투자(생산액) 추이
10. 欧州の建築許可数の推移	10. 유럽의 건축 허가 수의 추이
11. アジア・太平洋地域の実質GDP伸び率の推移	1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12. アジア・太平洋地域の直近のGDPと建設投資 (生産額)	1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근 GDP와 건설투자(생산액)
13. アジア・太平洋地域の名目建設投資 (生産額) の推移	1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명목 건설 투자(생산액)의 추이
14. MENA地域の実質GDP伸び率の推移	14. MENA 지역의 실질 GDP 신장률 추이
15. MENA地域の直近のGDPと建設投資 (生産額)	15. MENA지역의 최근 GDP와 건설투자(생산액)
16. MENA地域の名目建設投資 (生産額) の推移	16. MENA 지역의 명목 건설 투자(생산액)의 추이

자료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rice.or.jp/>).

〈표 2-15〉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건설경제리포트」 제71권 제3장 목차

第3章 海外の建設業	제3장 해외의 건설업
3.1 国際展開する建設関連企業の現状と戦略	3.1 국제 전개하는 건설 관련 기업의 현황과 전략
3.1.1 世界のインフラ需要	3.1.1 세계 인프라 수요
3.1.2 世界の建設関連企業	3.1.2 세계 건설 관련 기업
3.1.3 世界と我が国の建設関連企業の比較	3.1.3 세계와 일본의 건설 관련 기업 비교
3.1.4 世界の法体系と契約	3.1.4 세계의 법체계와 계약
3.2 アフリカの建設市場と日本企業の事業展開	3.2 아프리카 건설 시장과 일본 기업의 사업 전개
3.2.1 アフリカの建設市場の現状と展望	3.2.1 아프리카 건설 시장의 현황과 전망
3.2.1.1 アフリカの経済成長と課題 - 地域統合に向けたインフラと資金の不足	3.2.1.1 아프리카 경제 성장과 과제 - 지역 통합을 위한 인프라와 자금 부족
3.2.1.2 アフリカの取組	3.2.1.2 아프리카의 대처
3.2.1.3 各国のアフリカのインフラ事業へのアプローチ	3.2.1.3 각국의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 접근법
3.2.1.4 日本の取組	3.2.1.4 일본의 대처
3.2.2 アフリカにおける日本の建設企業の事業展開と展望	3.2.2 아프리카에서의 일본 건설 기업의 사업 전개와 전망
3.2.2.1 アフリカにおける日本の建設企業動向	3.2.2.1 아프리카의 일본 건설 기업 동향
3.2.2.2 ケニア・エチオピア・コートジボワール・ガーナの現況	3.2.2.2 케냐 에티오피아 코트 디부아르 가나의 현황
3.2.2.3 アフリカマーケットでの Made With Japan のあり方とは	3.2.2.3 아프리카 마켓에서의 Made With Japan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료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rice.or.jp/>).



자료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rice.or.jp/>).

〔그림 2-9〕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건설경제리포트」 표지 및 목차

6) 기타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8년 6월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KIND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프로젝트의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또한 PPP 사업을 통해 해당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투자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정보 플랫폼이자 Team Korea 사업추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해당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확보를 위한 사업개발·투자 활동을 영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KIND에서는 해외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OVICE의 주제별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수준이며, 자료개정도 미흡한 상황이다.



자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홈페이지(<http://www.kindkorea.or.kr/>).

[그림 2-10] KIND의 역할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ICA의 설립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OICA 사업의 기본방향은 우리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내외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과 상생할 수 있는 ODA를 추진하는 것이다. KOICA에서는 국내 ODA 대표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 개발환경과 최신 국제개발협력 동향, KOICA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ODA 지식은 ‘KOICA 개발협력 오픈데이터 포털’, ‘ODA 도서관’, ‘KOICA 통계조회 서비스’, ‘지식서비스’, ‘개발협력동향’, ‘연구보고서’ 등으로 제공된다.

‘KOICA 개발협력 오픈 데이터 포털’은 KOICA 주요 협력국별 데이터 및 사업정보와 개발협력 주요 지표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시각화하여 서비스하는 오픈 데이터 포털이다. 주요 정보는 KOICA 협력대상국별 개발협력 데이터, 지역·소득수준·분야·유형별 KOICA 사업 현황, OECD/DAC 마커별 KOICA 데이터, 5개 부문(경제, 교육, 보건의료, 환경, 거버넌스) 개발지표별 데이터,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지표별 데이터 등이다. KOICA 협력대상국은 지역별로 아시아 16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아프리카 16개국, 중남미 8개국, 중동 3개국, 동구 및 CIS 5개국으로 총 49개국이다. 각 국가별로 경제 개황(경상 GDP, 1인당 GNI, 노동력, 빈곤율), KOICA 사업(연도별 지원액, 연도별 사업수), 분야별 지원액, 유형별 지원액 그리고 사업리스트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https://www.koica.go.kr/>).

[그림 2-11] ‘KOICA 개발협력 오픈 데이터 포털’의 정보제공 분류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TRA는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하였다. 2001년 10월 1일 현재의 명칭인 KOTRA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업무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따라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였고, 1995년 국내 업체의 해외투자 지원 및 선진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2000년 7월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사업에 온라인 형태로 참가 및 현지 무역관과 온라인으로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 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KOTRA의 해외시장 정보는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의 주요 정보분류는 무역투자통계, 국가별 시장정보, 품목별 유망시장, 기업별 맞춤정보, 잠재파트너 정보이다. 무역투자통계는 한국 수출 현황, 글로벌 무역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통계와 각종 데이터의 시각화 및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시장정보는 국가별 시장개요, 국가주요지표(WorldBank), KOTRA 수집 품목 정보, 무역사기 사례, 수입규제 정보, 수출 분석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품목별 유망시장은 품목별 해당시장의 수입 규모 예측과 관련 무역 통계의 다차원 제공, 수출 분석 보고서, 수입규제 정보이다. 기업별 맞춤정보는 기업개요, 추천(시장/사업)정보,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보고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잠재파트너 정보는 KOTRA가 보유한 해외기업 정보와 기업별/품목별 잠재파트너 추천 등이다.

국가별 시장정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시장 개요를 시작으로 WorldBank 지표와 무역 및 투자 현황, 호조부진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출입 통계, 해시 뉴스보고서·상품보고서를 통한 시장동향과 무역 사기 사례, 수입 규제 품목 그리고 AI분석을 통한 주요 품목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과 수출 동향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KOTRA의 글로벌 정보는 무역투자의 진흥을 위한 국가별 시장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p>무역투자통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수출 현황, 글로벌 무역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통계 · 각종 데이터의 시각화 및 현황 정보 제공 (대시보드)
	<p>국가별 시장정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시장개요, 국가주요지표(WorldBank), KOTRA 수집 품목 정보 · 무역사기사례, 수입규제 정보, 수출 분석 보고서
	<p>품목별 유망시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해당시장의 수입 규모 예측 · 관련 무역 통계의 다처원 제공, 수출 분석 보고서, 수입규제 정보
	<p>기업별 맞춤정보 ⓘ 기업계정 로그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개요, 추천(시장/사업)정보제공 ·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보고서 제공
	<p>점재파트너 정보 ⓘ 기업계정 로그인 필요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무료)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가 보유한 해외기업 정보 · 기업별/품목별 점재파트너 추천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그림 2-12]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의 정보제공 분류

2. 소결

이상으로 살펴본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별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이며, 해외정보수집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거점국가에 대한 글로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시장 동향, 국가별 정보, 주제별 정보, 맞춤형 정보, 정보마당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정보에 따라 세부정보가 구분되는데, 국가별 정보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제공되나 15개 거점국가에 한해서 맞춤형정보서비스, 해외진출가이드북과 미국정보 종합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거점국가는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페루, 터키, 케냐, 캄보디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파키스탄, 콜롬비아, 미국으로 총 1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북에서는 해당 국가의 건설업면허 허가제도, 입찰제도, 보증제도 등 건설·ENG 관련 제도/

법규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주제별 정보는 크게 영업/기획, 입찰/계약, 조사/설계, 사업관리, 공통일반의 대분류 하에 32개의 주제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영업 및 기획’의 세부분류는 시장동향, 사회분화정치경제, 일반 법령 및 제도, 건설법령 및 제도, 사업개발계획, 건설인프라 현황 및 환경정보, 건설시장동향, 기술트렌드이다. 글로벌 건설제도는 ‘일반 법령 및 제도’와 ‘건설 법령 및 제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법령 및 제도’는 건설 프로젝트 수행이나 수익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재무, 세무, 노무 등을 비롯한 일반 법령 및 제도를 담고 있다. ‘건설 법령 및 제도’는 건설법령/제도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수행에 필요한 투자, 조달, 인허가, 입찰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포함한다. ‘일반 법령 및 제도’와 ‘건설법령 및 제도’의 세부정보를 살펴보면, 다양한 발행처(KOTRA, 법제처, 국세청, 해당 국가의 기관, 연구원 및 학회 등)에서 발간된 국가별·분야별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문과 영문 또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원문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단, 제공되는 정보는 각각의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많은 자료가 정제되지 않고 제공되는 상황이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해외건설협회 회원의 해외건설 활동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요 정보로는 총 78개국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 국별환경, 시장동향, 수주통계, 진출지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건설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국별환경’의 ‘건설시장현황’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하여 ‘건설업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건설업제도’는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도급한도·등급’, ‘입찰제도’, ‘보증제도’, ‘시공관리제도’, ‘부동산절차’로 세부 분류된다. 제공형태는 지역별 내부 담당자에 의해 세부 분류별로 정리되어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6개 지역에 대한 총 78개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OECD 해당 국가는 터키,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로 11개 국가이다.

한국법령정보원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법제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글로벌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국가는 총 55개 중점관리대상국가·지역·기구이며, 이중 OECD 가입국은 총 16개국이 포함된다.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관련 정보는 조사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별 건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법령체계도’는 각 국가의 주요법률을 주제별로 카테고리화하여 건설분야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국내외 입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맞춤형 법제정보’와 ‘외국법제동향’으로 구분되어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법제정보’는 외부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고, ‘외국법제동향’은 연구원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나 베트남, 태국 등 개발도상국도 포함되어 국가의 제한은 없다. 또한 조사대상도 의료, 제조, 건설, 주택, 국방, 금융, 보안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주로 해당 국가의 학교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인력을 활용한다.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는 2007년까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경제 동향조사를 수행하며 관련 보고서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후 「건설경제리포트」에 해외 건설시장 자료를 포함하여 발간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홈페이지에 “해외 건설시장”을 따로 구분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MENA 지역의 건설투자 추이를 게재하고 있다. 「건설경제리포트」는 2016년 이전까지 연 2회, 2017년 이후부터는 연 1회로 발간되고 있다.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는 매년 주요 이슈에 따라 포함여부가 다르며, 해당 국가의 건설시장 정보에 포함되어 게재된다.

그 밖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해외사업정보는 OVICE의 주제별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상황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KOICA 개발협력 오픈 데이터 포털”은 KOICA 주요 협력국별 데이터 및 사업정보와 개발협력 주요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정보는 KOICA 협력대상국별 개발협력 데이터 및 KOICA 사업 현황 등이며, 협력대상국은 총 49개국으로 OECD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의 주요 정보는 무역투자통계, 국가별 시장정보, 품목별 유망시장, 기업별 맞춤정보, 잠재파트너 정보이다. KOTRA의 글로벌 정보는 무역투자의 진흥을 위한 국가별 시장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 검토한 글로벌 정보제공 기관별 정보구축 및 제공사업 현황을 비교하면 <표 2-16>와 같다. KIND와 KOICA, KOTRA에서 제공되는 글로벌 건설정보는 OVICE와 중복, 주요 협력국정보, 시장정보 등으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경우에도 건설제도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수준으로 비교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과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 “최신외국법제정보” 그리고 “건설경제보고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교결과, 건설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가 일부 OECD 국가를 포함한 총 78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VICE는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건설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나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타기관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세부적인 제도정보를 제공하나 건설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 건설분야만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의 해외정보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사되며, 일부 해외진출을 위한 개도국이 포함된다. 건설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해당국의 건설시장과 경제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조사방법은 “OVICE”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가 내부담당자를 두어 조사되는 형태이며, “최신외국법제정보”는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건설경제보고서”는 현재 내부인력들의 연구조사 수준이나 과거에는 현지 사무실 및 파견 인력 등을 활용하였다.

〈표 2-16〉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기관별 비교

구분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	최신 외국법제정보	건설경제보고서
제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협회	한국법제연구원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대상국가	15개 거점국가, 모든 국가	총 78개국	모든 국가	유럽과 미국 중심, 일부 개도국
제공범위	도시건설 분야, 거점국가별 세부 건설정보	건설분야 포함 전반적 건설정보	건설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법제정보	건설시장현황 및 건설경제지표
조사방법	거점국가 내부 조사, 그 외 외부기관 자료	협회 내부 담당자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인력	現) 내부 조사 수준, 過) 과거 현지 사무실 및 파견 인력

III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

1.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2.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동향
3. 소결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

1.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은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분야별·국가별 건설제도를 재정리하고, OVICE의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와 ‘해외진출 가이드북’의 건설제도 정보현황을 검토,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국별환경’ 정보 중 건설제도 정보현황을 알아보았다.

1) 1차년도 연구결과

1차년도 연구에서는 글로벌 건설제도를 건설업 면허제도,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관련 제도, 건설공사 예산편성 및 원가계산 제도, 건설공사 발주제도, 건설업체 선별 및 입찰제도, 건설보증제도, 건설공사 낙찰제도,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 건설공사 첨단·신기술 도입제도로 총 9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OECD 등 주요 국가는 문헌조사를 통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 총 5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부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건설제도도 추가하였다.

〈표 3-1〉 1차년도 연구의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 및 조사 국가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	조사 국가
건설업 면허제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관련 제도	한국, 미국, 영국
건설공사 예산편성 및 원가계산 제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건설공사 발주제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건설업체 선별 및 입찰제도	한국,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건설보증제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건설공사 낙찰제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건설공사 첨단·신기술 도입제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각각의 건설제도 분야별·국가별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면허제도는 지역·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왔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지역은 정부에서 면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유사기관을 통해 업종을 등록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기관은 점차 민영화되고 있으며, 발주자는 등록된 업체정보를 발주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이 구분되나 주정부에 따라 면허제도의 차이가 있다.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선택하여 공사를 발주한다. 일본은 일식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된 허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식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관리의 역할로 직접 시공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국내의 경우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대업종화로 업종을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사업수행제도는 생애주기비용의 적용과 단계별 평가의 시행 및 통합사업팀의 활용이 추세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기본적으로 총생애주기비용 개념에 입각하여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단계별 평가를 통해 비용과 품질의 최적 조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사업팀을 구성하여 발주자와 사업 책임자, 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전문공급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동참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조정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생애주기비용이 반영되어 단계적으로 평가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저 비용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행부문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통합사업팀과 같이 사업수행을 위한 통합 의사소통 과정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예산편성 및 원가계산 제도는 총액예산편성의 원칙과 적산전문가의 판단 및 시장단가의 적용이다. 미국은 ‘총액예산 편성정책’을 통해 다년간의 총사업비를 한 번에 편성하고 있고, 일본은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로 장기공사에 대한 일괄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다.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미국은 민간 거래조사의 활용과 적산기술자의 판단을 반영하여 실제 공사원가와 실적공사비를 혼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총액단가 계약제도’로 적산전문가(QS)의 판단이 중요하며, 견적정보지 및 업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다. 특히 전문적인 적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입찰가격이 아닌 준공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종별 실제 시장거래단가를 활용하여 통신조사와 방문조사 등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예산편성제도의 경우에 ‘장기계속계약제도’로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원가계산과 관련해서는 2015년 ‘표준시장단가’방식이 도입되어 시공단가 등 시장거래가격이 반영되었고, 2017년부터 단가결정방식을 서류조사에서 현장조사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주제도는 '시공책임형 CM'제도와 다양한 VE방식의 활성화이다. 미국의 경우에 용역형 CM과 책임형 CM이 가장 활성화되어,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의 효과를 통해 건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활용과 함께 CM과 같은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다양하게 적용·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관주도 발주체계에 의해 CM방식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VE방식의 도입으로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시공책임형 CM'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VE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VE방식의 적용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선별 및 입찰제도는 객관적이고 선별 가능한 사전심사제도 운영 및 발주자의 기술부문 평가 강화이다. 미국은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입찰자의 객관적인 경영상태가 평가되는데, 입찰자는 경영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발주자는 소수의 입찰자에 대한 기술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입찰자의 사전선별과정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에서도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이러한 사전자격을 보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련기관 등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확인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증명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부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경우에 기술평가를 위한 민간 전문가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 평가과정에 사후평가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주자와 입찰자 모두의 사용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PQ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별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다 입찰자로 기술력을 평가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더욱이 발주자가 입찰자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보증제도는 계약자에 대한 민간 보증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증제도가 가장 발전한 국가는 미국으로 발주자와 계약자, 브로커, 보증회사로 구성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계약자는 브로커를 통해 기업의 세부적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회사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공제조합 등 국내 특성에 따른 자체적 보증시스템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개별기업의 사업수행능력을 조사·평가해주는 역할의 브로커회사의 도입하여 공제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낙찰제도는 최고의 가치를 평가하는 낙찰제도의 도입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모두 최

자가 낙찰제도에서 최고가치를 평가하는 낙찰제도로 변화하였다. 발주자는 입찰가격과 함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미국은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을 요구하고, 입찰자들과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가격과 함께 기술이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이용하고 있으나,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미흡하여 입찰가격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중소업체 보호제도는 일률적 제한 등 보호의 목적이 아닌 지역·중소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중소기업의 보호제도가 아닌 우대제도를 운영하여, 지역제한이나 대기업 제한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계약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계약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제한보다는 지역 내 영업소 설치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의 지역·중소업체 보호제도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에 해당 지역업체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업체간의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오히려 행정구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인접한 지역의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권역별로 제한범위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신기술 도입제도는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건설신기술제도는 기술의 시험단계부터 현장에 적용하여 단계별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설신기술이 지정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제품적 관점에서의 목표를 토대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속에 신기술확산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장 적용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설신기술을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현장적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특허를 활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등 실제 적용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최근 공공기관 시범적용 등을 통해 현장적용 실적을 지원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1〉은 1차년도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 5개국의 9개 분야 건설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세부 건설제도는 관련 법률이나 지침 등과 함께 주요 제도를 정리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및 유럽연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3-2〉 주요 5개 국가의 9개 분야 건설제도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면허	캘리포니아주 면허제도	Construction Line	건설업 허가제도	QUALIBAT, FNTP(협회)	신고제
수행절차	자본자산 조달을 위한 예산원칙, 「자본투자지침」	「건설공사 조달 수월성 달성지침」 / 관문 점검 절차	-	-	-
예산·원가	총액예산편성정책, 실적공사비 적산방법	총액단가계약제도, QS(민간) 역할	국고채무 부담행위제도, 예정가격제도	-	-
발주	용역형/책임형 CM, 디자인 빌드	일괄방식, 매니지먼트방식	설계/시공 분리발주, VE방식	-	-
선별·입찰	「연방조달규정」, 주정부 연간 PQ, 공사건별 PQ, 협상에 의한 계약	「정부공사 조달지침」, 사전자격심사(PQ), Construction Line	경쟁참가자 자격심사 (경영사항심사제도, 기술평가점수), 경쟁참가자격 등록, 지명경쟁입찰, 기술제안형 입찰방식, 경쟁적 교섭	(유럽) 유자격자명부제, 경쟁적 대화 절차,	
				QUALIBAT, FNTP 기업평가 증명서	적성/사전심사, 제한경쟁입찰
보증	이행/지급보증, 독립적 에이전트, 보증인수 기준	-	공사완성 보증인제도, 신이행보증제도, 입찰보증제도	(유럽) 공사이행보증	
낙찰	「연방조달규정」, 최저가 낙찰제, 「고속도로청 (계약행정 매뉴얼)」,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정부법」, 최저가 낙찰제, 최고가치 낙찰제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 저입찰가격조사제도, 최저제한가격제도, 종합평가 낙찰제도	-	-
지역·중소업체 보호	「중소기업법」, 「연방조달규정」, 계약목표치, 지방정부 조달제도, 입찰가격 우대제도	-	관공수법(계약목표) 공동기업체 제도, 분할발주제도, 등급(Rank)제, 지역요건(영업소설치)	(유럽) 지역하도급 및 분리발주	
첨단·신기술	미국혁신전략 스마트시티-이니셔티브/법안, 국가 스펙트럼 전략	건설산업재인식, 국가건설전략, 건설 2025, 건설 분야 협약	신기술활용시스템, 건설기술심사증명사업, 기술제안 종합평가	-	-

2) OVICE

(1) '미국정보 종합가이드'

'미국정보 종합가이드'는 크게 '핵심정보 활용안내'와 '연방정부 Indicator', '민간기구 Indicator'로 나누어져 있다. '핵심정보 활용안내'에서는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안내', '미국 건설관련 법체계 안내', '미국 시방서 활용 안내', '미국 연방 건설 조달 안내', '미국(건설) 연방조달 표준 양식 및 규정 안내', '미국 친환경 인증제도 안내', '미국 건설안전 정책 안내', '미국 PPP제도 안내', '미국 WBDG 홈페이지 활용 안내' 그리고 '미국 건축물 관련 코드 및 기준 안내'로 구성된다.

각각의 가이드별 세부 내용분류는 <표 3-3>과 같다.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안내'에서는 건설보증제도의 개념, 보증본드의 필요성, 보증 방식 및 종류, 보증본드의 제출 그리고 외국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본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건설관련 법체계 안내'는 미국법령체계, 미국연방정부 조달관련 주요 법령,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주요 법령들(Major Statutes), 주요 규정들(Major Regulations), 규칙(정) 제정자(Rulemakers), 연방조달규정(FAR) 발행, 미국인프라사업 진출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 건설 조달 안내'에서는 미국 연방 건설 조달 개관, 연방 조달 근거법령, 건설조달의 기본인 입찰제도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미국 친환경 인증제도'에서는 미국 친환경인증제도(GREENGUARD)와 미국의 친환경 건물 인증(LEED)제도, '미국 건설안전 정책 안내'에서는 미국의 건설안전 관리제도와 안전관리체계, '미국 PPP(Public-Private-Partnership)제도 안내'에서는 미국 PPP 시장 개요 및 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에서는 '연방정부 Indicator'와 '민간기구 Indicator'로 구분하여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Indicator'에서는 연방정부(미국)의 조달시스템, US CODE 시스템, GSA LEED 어플리케이션, 연방정부(미국)의 그린건축물 인증 시스템 등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무원에서 요구되는 계약 유형 일반지침, 공공건물서비스 비용 및 일정관리 정책의 요구사항, 아동 보호센터 설계 가이드, 연방정부(미국) 공공건축물 서비스 기준,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서, 국가환경정책법 세부규정, 자원보존 및 자원재생법에 관한 지침서, 미국 연방법원 설계지침 등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세부기준을 제공한다. '민간기구 Indicator'에서는 미국

〈표 3-3〉 OVICE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의 '핵심정보 활용안내' 정보구성 체계

구분	세부 내용분류	
미국의 건설보증제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보증제도 개념 • 보증본드의 필요성 • 보증 방식 및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본드의 제출 • 외국 건설업체에 대한 Surety Bond 발급
미국 건설관련 법체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법령체계 • 미국연방정부 조달관련 주요 법령 • 연방조달규정(FAR) • 주요 법령들(Major Statu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규정들(Major Regulations) • 규칙(정) 제정자(Rulemakers) • 연방조달규정(FAR) 발행 • 미국인프라이사업 진출 관련법
미국 시방서 활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표준시방서 • 미국 CODE(코드) • National Code-N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cal Code • WBDG(Whole Building Design Guide) 사이트 활용방법
미국 연방 건설 조달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 건설 조달 개관 • 연방 조달 근거법령 • 건설조달의 기본인 입찰제도 • 정부의 입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서)의 적정성 • 입찰자의 자격 • 최종 낙찰자 선정 • 이의 신청
미국(건설) 연방조달 표준 양식 및 규정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양식 33(Standard Form 33) • 건설 표준 양식 1417(Standard Form 1417: SF 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양식 1442 • 표준 조항(Standard Provisions) • 기타 공통 IFB 조항(규정)
미국 친환경 인증제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친환경 건물의 필요성 및 발전 • 미국 친환경인증제도 (GREENGU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친환경 건물 인증(LEED)제도 • 미국 친환경 건축시장 동향 • 미국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반발
미국 건설안전 정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건설안전 관리제도 • 미국의 안전관리체계 경과 • 미국의 안전관리체계 • 미국의 건설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산업안전보건청(OSHA) • 미국의 건축안전 홈페이지 • 미국 건설안전 노동부관련 주요 법률현황
미국 PPP제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PPP 시장 개요 및 제도 • 미국 PPP 시장 현황 및 전망 • 트럼프의 공공 인프라 정책 • 주마다 다른 미국의 PPP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PPP 시장 진출 전략 • 경쟁국 기업 진출 사례 • 진출시 고려사항 • 미국 PPP 시장 참조 사이트
미국 WBDG 홈페이지 활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BDG 소개 • 설계 추천 • 프로젝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시설 기준 • 평생 교육
미국 건축물 관련 코드 및 기준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코드의 역사 • 건축 분야 코드 • 건축 프로그래밍 분야 • 토목 분야 • 건적(비용추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분야 • 소방 설비 분야 • 공조시스템 분야 • 인테리어 설계 분야 • 구조 분야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건설산업 마스터시방서,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17 공공인프라 평가카드, 미국건설산업 표준분류시스템, 미국 건축가협회(AIA)·EJCED·DBIA의 계약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3-4〉 OVICE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의 ‘연방정부/민간기구 Indicator’ 정보구성 체계

구분	세부 내용분류
연방정부 Indic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미국) 조달시스템 US CODE 시스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계약 유형 일반지침 공공건물서비스 비용 및 일정관리 정책 요구사항 GSA LEED 어플리케이션 아동보호센터 설계 가이드 연방정부(미국) 공공건축물 서비스 기준 연방정부(미국) 그린건축물 인증 시스템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서 국가환경정책법 세부규정 자원보존 및 자원재생법에 관한 지침서 미국 연방법원 설계지침 공공건축서비스를 위한 시설기준 콘크리트 구조를 위한 건축법규 요건 연방육상도로사업 개발 및 설계매뉴얼 터널설계 및 시공기술 매뉴얼(FHWA) 국가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 연방녹색건설안내서
민간정부 Indic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건설산업 마스터시방서 (OmniClass)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17 공공인프라 평가카드 미국 건설산업 표준분류시스템 미국 건축가협회(AIA)의 계약문서 미국 EJCED의 계약문서 미국 DBIA의 계약문서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세부항목별 정보내용을 살펴보면, 각각의 분류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는 형식이다. 해당 자료는 제목과 목차만 번역된 원문으로 제공된다. ‘연방정부(미국) 조달시스템(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의 경우에는 연방 조달규정의 정의를 명시하고 총 53개의 Part로 구성된 조달규정과 해당 원문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표 3-5〉 OVICE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의 ‘연방정부(미국) 조달시스템’의 첨부된 자료정보

세부항목	첨부된 자료
연방정부(미국) 조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미국) 건축 및 엔지니어 선정법 연방정부(미국) 조달규정 시스템 연방정부(미국) 조달규정의 용어 및 조건 정의 연방정부(미국) 조달규정에 대한 부적절한 사업관행과 개인간의 이해갈등 연방정부(미국) 조달규정의 행정업무 연방정부(미국) 조달규정 계약행위의 공고 연방정부(미국) 조달규정 경쟁의 요건 연방정부(미국) 조달규정의 조달계획 총 53개 Part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2) '해외진출 가이드북'

'해외진출 가이드북'은 미국을 제외한 14개 거점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페루, 터키, 케냐, 캄보디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파키스탄,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 OECD 가입국은 2개국(터키, 콜롬비아)이고, 대부분 개도국이 해당되어 대표로 베트남의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살펴보았다.

'해외진출 가이드북(베트남편)'에서는 크게 '건설·ENG 시장 현황/전망', '건설·ENG 관련 제도/법규', '외국기업 진출 환경/동향', '노동 및 근로 환경', '건설·ENG 사업관행/진출전략'으로 구분하여 해당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제도는 '건설·ENG 관련 제도/법규'에서 담고 있으며, '건설·ENG 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건설·ENG 관련 세법', '금융환경'으로 구분한다. 건설제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건설·ENG 관련 제도'로 건설업면허 허가제도, 보증제도, 입찰제도로 세부 분류되어 정보가 제공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면허 허가제도'에서는 현지 법인설립, 건설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자본금 납입방법 및 외환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입찰제도'는 제도개요와 입찰법 적용대상, 입찰 요건, 입찰 승인, 입찰절차, 주요 산업별 입찰 공고 발표기관 그리고 최근동향이 정리되어 있다.

〈표 3-6〉 OVICE '해외진출 가이드북(베트남편)'의 '건설·ENG 관련 제도/법규' 정보구성 체계

구분	세부 내용분류
건설·ENG 관련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면허허가제도 • 보증제도 • 입찰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설립 • 최근동향 • 현지지사, 지점, 주재원 설치
건설·ENG 관련 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 작간접세 • 소득세
금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 • 외환관리 • 주요 금융기관 • 환율 • 현지금융조달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그 밖에 '해외진출 가이드북(터키편)', '해외진출 가이드북(우즈베키스탄편)', '해외진출 가이드북(케냐)' 등 다른 가이드북에서도 동일한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별 정보구성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3)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국별환경’ 정보에서는 총 78개국의 세부정보가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다. 78개국 중 OECD 가입국은 터키,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로 11개 국가가 해당된다. 이 중 대표적 OECD 가입국인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남미국가인 칠레를 대상으로 ‘국별환경’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정보를 알아보려고 한다. ‘국별환경’의 국가별 세부정보는 크게 일반현황, 건설시장현황, 외국기업진출환경, 아국진출현황, 진출전망으로 구성된다. 이 중 ‘건설시장현황’에서 다시 건설시장개요, 건설업제도, 건설산업현황, 공사 발주기관으로 분류된다. 제공정보는 개통일과 최근 등록일,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어 자료의 생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건설업제도’는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도급한도·등급, 입찰제도, 보증제도, 시공관리제도, 부동산절차로 세부 분류된다. 각각의 세부 분류별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허가제도’는 영국의 건설면허제도의 현황과 유자격명부의 등록절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지사설치제도’는 외국기업의 진출형태(지점, 사무소, 법인 등)와 진출형태별 절차, ‘도급한도·등급’에서는 담당 정부기관과 관련 제도(공동도급제도, 원·하도급 파트너링 시스템, Fair Payment Practice) 그리고 문제점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입찰제도’에서는 「공공건설계약규정」과 사전자격심사, 정부공사조달지침 등 관련제도 운영현황과 입찰형태(공개경쟁입찰, 제한적 경쟁입찰, 수의계약)와 제한적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설명한다. 또한 유자격자명부 및 입찰자 선정과 낙찰자 결정, 입찰 사이트, 건설보증제도, 민관협력제도(PFI) 그리고 시사점 및 진출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증제도’는 관련 근거와 건설보증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유의사항을 포함한다. ‘시공관리제도’에서는 ‘Construction Line’의 개요와 등록절차, 해당 시스템을 통한 업체선정방식과 사후평가, 그리고 정부공사계약 관련 법령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절차’에서는 ‘부동산 개발형 사업’과 ‘도시계획’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개발형 사업’은 정부의 주택건설 계획현황과 토지소유 형태 및 개발 인가, 관련 세제, 그리고 사업절차 등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은 관련 법률과 체계, 계획허가절차(계획허가제), 그리고 최근 런던 주택시장의 현황을 담고 있다.

캐나다의 ‘건설업제도’는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입찰제도, 보증제도, 시공관리 제도로 세부 분류된다. ‘면허·허가제도’에서는 면허제도 현황과 각 지방정부의 담당부서

정보를 제공한다. ‘지사설치제도’는 법인설립의 개요와 절차, 법인형태(연방법인, 주법인) 별 특성과 지사사무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제도’는 공공입찰관련 주요 기관과 발주처의 업체 검색과 발주규모별 발주방법이 포함된다. ‘보증제도’에서는 보증형태와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시공관리제도’는 공공공사의 감리제도, 공공 감리인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공공 감리인의 비리예방을 위한 통제수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3-7〉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국별환경’에서 제공하는 영국의 ‘건설업제도’의 정보내용

구분	세부 내용		
면허허가제도	• 현황	• 등록절차	
지사설치제도	• 현황	• 진출형태별 절차	• 관련기관
도급한도등급	• 현황 • 제도	• 문제점 • 방안	
입찰제도	• 현황 • 입찰형태 • 입찰 사이트	• 건설보증제도 • 영국의 민관협력제도(PFI) • 시사점	• 관련법령 • 진출전략
보증제도	• 개요	• 종류	• 유의사항
시공관리제도	• 개요 • 등록절차	• 업체선정방식 • 사후 평가	• 정부공사계약 관련 법령
부동산절차	[부동산 개발형 사업]	• 현황	• 개요
	[도시계획]	• 개요 • 도시계획체계	• 계획허가절차 • 최근 런던 주택시장 현황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cak.or.kr/>)

〈표 3-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국별환경’에서 제공하는 캐나다의 ‘건설업제도’의 정보내용

구분	세부 내용		
면허허가제도	• 현황	• 지방정부 담당부서	
지사설치제도	• 법인 설립 개요와 절차	• 법인형태별 특성	• 지사, 사무소 설치
입찰제도	• 공공입찰관련 주요 기관	• 발주처의 업체 검색	• 발주 방법
보증제도	• 개요		
시공관리제도	[공공공사의 감리제도]	• 감리인의 권한	• 컨설턴트의 비리예방을 위한 통제수단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cak.or.kr/>)

칠레의 '건설업제도'는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도급한도·등급, 입찰제도, 보증제도, 시공관리제도, 부동산절차, 부동산제도, 부동산가격으로 세부 분류된다. '면허·허가제도'에서는 건설업허가 신청기관과 승인절차, 건설업 종류(대형업, 소형업, 컨설턴트)별 신청서류와 등록업종, 등록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사설치제도'는 지사설립 절차와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절차, '도급한도·등급'은 건설업 종류별·등록업종별 사업규모와 인력보유수 및 등급분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제도'에서는 일반적 입찰 관행(절차)과 PQ 관련 정보(서류 구입과 제출, 신청서 평가, 통과업체의 회의 참석) 및 낙찰, 그리고 주요 참여 외국기업, 정부조달 시장 관련 입찰제도(개요, 조달청, 절차 등)와 조달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증제도'는 양허사업에 대한 보증종류(입찰보증, 건설보증, 운영보증), 외국인 투자제도 등을 담고 있다. '시공관리제도'는 감리자 선정 및 역할, 조정위원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절차'의 정보는 '부동산 개발형 사업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허가와 토지의 합병 등과 관련된 담당기관,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정보를 포함한다. '부동산제도'와 '부동산가격'은 아직 정보구성 중이다.

〈표 3-9〉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국별환경'에서 제공하는 칠레의 '건설업제도'의 정보내용

구분	세부 내용		
면허·허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허가 • 건설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종류 • 등록비용 	
지사설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 설립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도급한도·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분류 	
입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입찰 관행 • PQ서류 구입 • PQ서류 제출 및 참여 보증금 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 신청서 평가 • PQ통과 업체의 회의 참석 • 낙찰 • 주요입찰에 참여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회사 동정 • 정부조달 시장(개요, 조달청, 입찰 절차 등) • 조달제도, 유의사항 등
보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14조에 의한 투자 	
시공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부동산절차	[부동산 개발형 사업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합병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 허가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cak.or.kr/>)

2.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동향

1) OVICE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OVICE에서 제공되는 '주제별 정보'의 '건설 법령 및 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대상국 중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는 폴란드, 터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미국으로 총 6개국이다.

먼저, 유럽지역으로 폴란드의 경우에는 건설제도분야로 건축법과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건설코드강령(민법), 신공항 건설법안, 부동산 개발과정(건축법), 민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언어는 자료에 따라 영어와 폴란드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도 존재한다. 해당 자료는 폴란드 법률저널과 정부기관, 세계법제정보센터 및 주 폴란드 한국 대사관 등 다양한 곳에서 수집하고 있다. 자료는 2017년 11월 9일과 동년 12월 14일로 2차에 걸쳐 생성되었으며, 각각의 자료는 1964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시간차가 매우 크다.

〈표 3-10〉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폴란드)

제도 구분	언어	출처	생성일	발행일
건축법	영어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12-14	1994-07-07
민사소송법	폴란드어	폴란드 법률저널	2017-12-14	1964-11-17
행정절차법	폴란드어	폴란드 법률저널	2017-12-14	2016-01-07
건설코드강령(민법)	폴란드어	Kancelaria Sejmu	2017-12-14	1964-04-23
신공항 건설법안	한글	주 폴란드 한국 대사관	2017-11-09	2017-09-21
부동산 개발과정(건축법)	영어	PAIH	2017-11-09	-
민법	영어	CFE	2017-11-09	2016-04-19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

중동지역의 터키는 수질오염, 폐유, 폐기물, 도시폐수, 토양오염,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등 환경분야에 대한 제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조달과 건설운영, 건설조직, 노동, BOT, BLT, 외국인 직접투자, 통화가치보호 등 시장진출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언어는 터키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의 출처는 대부분 터키정부이다. 자료는 2017년 11월 9일과 동년 9월 26일로 2차에 걸쳐 생성되었으며, 각각의 자료는 1934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발행시점이 매우 다양하다.

〈표 3-11〉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터키)

제도 구분	언어	출처	생성일	발행일
수질오염관리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4-12-31
폐유관리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8-07-30
폐기물관리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5-04-02
도시폐수처리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6-01-08
폐기물정기보관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0-03-26
약취배출억제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3-07-19
폐기물소각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0-10-06
토양오염관리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0-06-08
민간동반자관계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5-05-00
포장폐기물관리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1-08-24
공공조달법(터키어)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2-01-00
공공조달법(영어)	영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2-01-00
폐수저장시설 고시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1-04-26
주요 건설 조직	영어	-	2017-11-09	2017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안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5-04-23
지역보존법(이스탄불)	터키어	입법정보시스템	2017-11-09	1983-11-22
공공조달계약법 법률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2-01-00
토지등기법	터키어	입법정보시스템	2017-11-09	1934-12-22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0-10-27
굴착/시공/철거폐기물 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4-03-17
환경소음 평가/관리 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0-06-04
환경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6-04
환경영향평가 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3-10-03
환경도시화부 조직/직무 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1-04-06
BOT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1994-06-08
BLT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3-02-21
대기질 평가/관리 규정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08-06-06
대기질 평가/관리 순환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3-09-09
대기오염 관리/방지 회람	터키어	터키 정부	2017-11-09	2010-09-28
터키 투자 환경	영어	터키 투자청	2017-09-26	2017
건설운영이전법 시행령	영어	각각 변호사 파트너십	2017-09-26	2011-06-21
외국국적자 고용규제	영어	터키 정부	2017-09-26	2003-09-06
교통해양통신부 조직/직무 법	영어	터키 정부	2017-09-26	2011-11-01
외국인 취업허가 법률	영어	터키 정부	2017-09-26	2003-03-06
공공조달계약 법률	영어	터키 정부	2017-09-26	2002-01-22
노동법	영어	터키 정부	2017-09-26	2003-06-10
외국인 직접투자 법률	영어	터키 정부	2017-09-26	2003-06-05
외국인 직접투자 법률	영어	터키 정부	2017-09-26	2003-06-17
통화가치보호 법령	영어	터키 정부	2017-09-26	2010-01-06
에너지/천연자원/교통투자 건설법	영어	터키 법률사무소	2017-09-26	2013-07-24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

중남미지역의 멕시코는 국토계획과 도시개발법, 재건축관련 제도와 공공사업의 계획과 지원 그리고 건설 규정, 건설근로자, 건설 사업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언어는 대부분 스페인어이며, 자료의 출처는 멕시코 정부와 관련 학회 등이다. 자료는 2018년 11월 6일에 생성되었으며, 자료의 발행일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로 비교적 최근 정보를 담고 있다.

〈표 3-12〉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멕시코)

제도 구분	언어	출처	생성일	발행일
재건축 관련 제도	스페인어	CDMX	2018-11-06	2017-09-19
도시개발법(연방)	스페인어	멕시코 정부	2018-11-06	2018-03-15
건설근로자 사회보장 의무규정	스페인어	멕시코 정부	2018-11-06	2008-03-04
건설 규정(연방)	스페인어	멕시코 정부	2018-11-06	2004-01-29
공공사업 계획 프로세스	스페인어	SCT	2018-11-06	2013-05
국제개발협력법	스페인어	멕시코 정부	2018-11-06	2015-12-17
도로/교량/연방교통법	스페인어	멕시코 정부	2018-11-06	2018-06-25
보험/보증법	스페인어	멕시코 정부	2018-11-06	2018-06-22
공공사업 지원 가이드	스페인어	SCT	2018-11-06	2013-05-00
재건축 구조 지침	스페인어	CDMX	2018-11-06	2018-12-22
재건축 지원 허가 지침	스페인어	CDMX	2018-11-06	2018-06-22
국토계획/도시개발법	스페인어	멕시코 정부	2018-11-06	2016-11-28
도시개발법(연방)	스페인어	CDMX	2018-11-06	2003-12-31
건설사업 법률 Q&A	영어	PRACTICAL LAW	2018-11-06	2013-09-01
건설 규정(연방)	스페인어	멕시코 구조공학회	2018-11-06	2017-06-00
건설 규칙(연방)	스페인어	멕시코 정부	2018-11-06	2017-06-00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

중남미지역의 칠레는 지열에너지, 광물자원개발 등 환경산업분야와 시공관리, 도급한도등급, 면허허가 등 건설산업분야 그리고 공공주택이나 건축, 수도 등 도시/건설분야의 제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언어는 자료의 출처에 따라 스페인어와 한글로 제공되며, 자료출처는 칠레 정부와 한국 대사관 및 연구기관 등이다. 자료는 2017년 2월 24일에 생성되었으며, 자료의 발행은 대부분 2010년 이후의 자료이다.

〈표 3-13〉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칠레)

제도 구분	언어	출처	생성일	발행일
환경일반기준법	스페인어	칠레 정부	2017-02-24	2016-06-00
환경산업시장 진출전략	한글	환경산업전략연구소	2017-02-24	2010-12-00
시공관리제도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2-24	2014-05-00
도급한도등급분류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2-24	2014-08-00
건설업 면허허가제도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2-24	2014-08-00
지열에너지개발권법	한글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02-24	2015-01-00
공공주택 공공소유토지 분할법	스페인어	칠레 주택도시부	2017-02-24	2012-03-00
건축의 법적 규칙	스페인어	칠레 주택도시부	2017-02-24	2012-05-00
지열 에너지 양허에 관한 법률	스페인어	칠레 광업부	2017-02-24	2010-02-00
도시/건설 일반법, 건설 품질기준	스페인어	칠레 주택도시부	2017-02-24	1996-09-00
수도 관련 법규	스페인어	칠레 법무부	2017-02-24	2014-09-00
광물자원개발 관련 법제	한글	주 칠레 한국 대사관	2017-02-24	2015-03-00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

중남미지역의 콜롬비아는 하수도 분야와 사회주택 분야의 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2건에 불과하다. 언어는 자료의 출처에 따라 스페인어와 한글로 제공되며, 자료출처는 콜롬비아 정부와 한국 연구기관이다. 자료는 2017년 2월 24일에 생성되었으며, 자료의 발행은 2015년과 2011년에 이루어졌다.

〈표 3-14〉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콜롬비아)

제도 구분	언어	출처	생성일	발행일
하수도 개선 마스터플랜	한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7-02-24	2015-04-00
사회주택개발 관련 규정	스페인어	콜롬비아 주택부	2017-02-24	2011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북미·태평양지역의 미국은 수자원과 육상교통 관련 제도와 건설 관련 입찰, 시공관리, 도급한도등급분류, PPP 그리고 투자여건과 절차, 외국의 투자현황, 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는 자료의 출처에 따라 영어와 한글로 제공되며, 자료출처는 미국 정부와 해외건설협회, KOTRA 등이다. 자료는 2018년 1월 29일, 2017년 11월 27일과 9월 15일, 5월 30일, 2월 27일 그리고 2014년 11월 24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주기적인 자료생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발행년도는 1972년에서

2017년으로 육상교통지원법과 건축/엔지니어링 선정법과 관련된 자료가 매우 과거의 시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5〉 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미국)

제도 구분	언어	출처	생성일	발행일
용수/폐수 조항(수자원 법률)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2016-12-16
수자원 개발(수자원 법률)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2016-12-16
기타 문제(수자원 법률)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2016-12-16
자연 자원(수자원 법률)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2016-12-16
고속도로안전(육상교통지원법)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1983-01-06
고속도로수익(육상교통지원법)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1983-01-06
고속도로개선(육상교통지원법)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1983-01-06
연방대중교통(육상교통지원법)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1983-01-06
상업운송차량안전(육상교통지원법)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8-01-29	1983-01-06
수질오염규제법	영어	미국 환경보호국	2018-01-29	2002-11-27
건축/엔지니어링 선정법	영어	미국 연방정부	2018-01-29	1972-10-27
조달시스템(건설계약)	영어	미국 정부 출판부	2017-11-27	2017-10-06
진출/투자 인센티브(앨라배마주)	한글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09-15	2017-09-05
투자여건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5-30	2017-12-28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5-30	2017-12-28
입찰제도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5-30	2017-12-28
시공관리제도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5-30	2017-12-28
부동산 개발형 사업절차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5-30	2017-12-28
도급한도 · 등급분류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7-05-30	2017-12-28
주별로 다른 PPP제도	한글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02-27	2017-02-27
외국의 투자현황	한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4-11-24	2014-11-24

자료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의 '건설 법령 및 제도'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최신외국법제정보

다음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최신외국법제정보를 통해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동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신외국

법제정보는 ‘맞춤형 법제정보’와 ‘외국법제동향’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 ‘외국법제연구’, ‘Global Legal Issue’, ‘비교법 현안분석’, ‘글로벌 현안분석’ 등이 연도별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발간된 최신외국법제정보 중 건설제도와 관련된 주제를 정리하면 <표 3-16>부터 <표 3-19>까지와 같다.

〈표 3-16〉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연도별 주제(2007~2008년도)

발간년도	발간호	구분	주제
2007년	제1호	외국법제동향	• 독일 주택소유권법 개정 동향
	제2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 산림법상 보안림제도 및 임지개발 허가제도 • 프랑스 난방 온도제한 및 위반시 제재제도에 관하여
		외국법제동향	• 프랑스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법제화
	제3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독일 산지전용허가제도 • 일본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관한 법령 현황
		외국법제동향	• 영국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법 • 중국 외상투자과 건설공정서비스기업 관리제도
	제4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독일 건축 관련 법제 • 일본 건축사제도 • 영국 건축사제도
	제5호	맞춤형 법제정보	• 프랑스 건축사 제도
제6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독일 교통·건설·도시개발부의 조직과 임무 • 일본 건설관련 정부조직의 편제 • 프랑스 건설관련 정부조직의 편제	
2008년	제2호	외국법제연구	• 일본의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제3호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의 공간문화 관련법령 • 영국의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1990(I) • 영국의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1990(II) • 프랑스의 문화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제4호	맞춤형 법제정보	• 프랑스 건물 전문 건축가
	제5호	맞춤형 법제정보	• 프랑스의 역사 건축물에 관한 법 제도
	제6호	외국법제동향	• 미국의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디자인규제 관련 판례입장
	제9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독일 경쟁제한 방지법(GWB) 하의 공공조달
	제10호	맞춤형 법제정보	• 영국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시 손실보상액 산정 관련 규범
	제11호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시 손실보상액의 산정 • 일본의 예산집행조사 제도 • 프랑스의 공용수용과 보상제도 개요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신외국법제정보 발간목록(2007~2021)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7〉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연도별 주제(2009~2011년도)

발간년도	발간호	구분	주제
2009년	제1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독일의 도로교통법 체계
		외국법제동향	• 독일의 공시최고절차(2)
	제2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공익사업 손실보상 관련 법령(I)
	제3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공익사업 손실보상 관련 법령(II)
	제4호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 보유세제도 및 경감·면세제도의 소개
		외국법제연구	• 독일 재생가능 에너지 신법(Erneuerbare EnergienGesetz2009)
	제7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농지관련 규정(농지법의 소유와 전용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외국법제연구	• 2009 영국의 저탄소 이행 계획 • 독일의 교통 관련 기후변화대응 법제
	제8호	외국법제동향	• 미국 기후안보법(The 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의 소개
제9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법제도 • 일본의 산지개발 허가와 산지형질 변경	
	외국법제연구	•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일본의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규제의 동향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동향 및 시사점	
2010년	제6호	맞춤형 법제정보	• 영국의 친환경 건축관련 법제 개관
	제8호	맞춤형 법제정보	• 영국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관리 체계
		외국법제동향	• 기후변화 대응 캐나다의 최근 입법 동향
	제9호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의 관광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기준 • 영국의 친수구역개발 관련 제도의 검토
		외국법제동향	• 일본의 건축물환경위생관리 기술자 제도
	제10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독일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 독일의 실내공기질 기준 현황
외국법제동향		• 태양광발전 육성에 관한 일본의 최근동향	
2011년	제2호	맞춤형 법제정보	• 가나의 부동산 및 건설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미얀마의 엔지니어링 관련 법률의 개요
	제3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독일의 공공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령
	제4호	맞춤형 법제정보	• 영국의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관련 법령 • 일본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관련 법령
	제5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도로법제 및 운영
	제8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도쿄도 유비쿼터스 계획·긴자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신외국법제정보 발간목록(2007~2021)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8〉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연도별 주제(2012~2017년도)

발간년도	발간호	구분	주제
2012년	제2호	맞춤형 법제정보	• 중남미 3개국의 국토개발 관련법 고찰
	제5호	맞춤형 법제정보	• 남아공의 유료도로법 및 토지수용법 개요
	제7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제도
	제8호	Global Legal Issue	• 미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제 • 일본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제
2013년	제1호	비교법 현안분석	• 미국의 주거복지정책 관련 법률체계 개요 • 영국의 주거복지 관련 법제와 시사점
	제2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의 2006년 이후 개정내용
		외국법제동향	• EU의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를 향한 로드 맵 2050
	제3호	외국법제동향	• 몽골의 부동산법 변화와 과제
	제5호	외국법제동향	•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FI법) 개정사항 검토
제7호	외국법제동향	• 영국의 중간 소송 관련 법령과 적용사례	
2014년	제1호	외국법제동향	• 일본의 「교통정책기본법」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글로벌 현안분석	• 러시아의 토지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제3호	외국법제동향	• 중국의 부동산 통일등기제도 구축 동향
		글로벌 현안분석	•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법제 개관
	제4호	글로벌 현안분석	• 나이지리아의 에너지 법제와 반부패 조사기구
	제6호	맞춤형 법제정보	• 프랑스법상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외국법제동향	• 일본의 신성장전략과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정
제7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현안분석	• 캄보디아의 외국인 구분소유권	
2015년	제1호	글로벌 현안분석	• 독일의 리츠산업과 법제 동향
	제4호	글로벌 현안분석	• 프랑스의 민간임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 검토
2016년	제4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건축리모델링 관련 법제
2017년	제4호	맞춤형 법제정보	• 영국 공동체 가치자산법(Asset of Community)에 관한 연구
	제7호	맞춤형 법제정보	• 독일 법령상 휴게 및 사업장 시설 기준
	제11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제12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공공조달, 국가계약, 예산집행 관련 법령조사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신외국법제정보 발간목록(2007~2021)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9〉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연도별 주제(2018~2020년도)

발간년도	발간호	구분	주제
2018년	제2호	외국법제동향	• 호주 부동산개발관련 세법
	제4호	외국법제동향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스위스 에너지법의 시사
	제5호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 주정부의 토지은행법에 대한 비교 검토
	제6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대만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제에 관한 소개
2019년	제1호	맞춤형 법제정보	• 일본 '기후변동 적응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제2호	외국법제동향	•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住宅宿泊事業法)의 검토
	제3호	외국법제동향	• 베트남 「도시개발관리법」 제정의 법적 쟁점
	제4호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의 물 인프라 사업 지원에 관한 입법현황 • 일본 수도법(水道法) 개정의 배경과 운용실태 • 영국 상하수도 인프라 지원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2020년	제3호	외국법제동향	• 일본의 「지역재생법」 주요 개정 내용
	제4호	외국법제동향	• 일본의 학교복합화 시설 관련 법제 주요 내용
	제5호	외국법제동향	• 미국의 「공정주택법」주요 내용 • 일본의 임대용 주택관리 관련 법제 주요 내용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신외국법제정보 발간목록(2007~2021)을 토대로 저자 작성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주제는 도시, 건축, 토지, 부동산,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공공조달이나 동반성장 등 건설분야와 관련된 정보내용을 검토하여 추출하였다. 전체 건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신외국법제정보에서 제공되는 정보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건설분야의 정보도 이에 맞춰 줄어드는 추세로 2007년 15건,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9건, 2011년 7건, 2012년 5건, 2013년 7건, 2014년 9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2019년 6건, 2020년 4건을 기록하고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정보가 가장 많았고, 차츰 감소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신외국법제정보에서 제공하는 각 분야별 주제 건수가 적어진 결과로, 건설분야에 해당하는 주제만 감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전체 건수 대비 건설분야 주제건수를 비교하면 2017년도와 2007년도가 21.1%, 20.3%로 높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는 11.3%의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독일 15건, 영국 14건, 미국 12건, 프랑스 10건, 기타 15건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국가에서는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의

OECD국가와 가나,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 개도국까지 다양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즉, 글로벌 건설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제도를 포함하고 미국 또는 유럽의 국가들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식민지시대의 제도가 이어져 내려옴에 따라 국내 제도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3-20〉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연도별국가별 건수분석

연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전체	기타 국가
2007년	4	4	2		4	1		15	74	
2008년	1	4	3	3	2			13	114	
2009년	5		1	3	6			15	103	
2010년	2		3	1	2		1	9	102	캐나다
2011년	1		1		3		2	7	85	가나, 미얀마
2012년				1	2		2	5	71	중남미, 남아공
2013년			2	1	2		2	7	56	EU, 몽골
2014년		1			3	1	4	9	63	러시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2015년	1	1						2	41	
2016년					1			1	41	
2017년	1		1		2			4	19	
2018년				1	1		3	5	50	호주, 스위스, 대만
2019년			1	1	3		1	6	48	베트남
2020년				1	3			4	39	
합계	15	10	14	12	34	2	15	102	906	

제공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맞춤형 법제정보’가 60건, ‘외국법제동향’이 25건으로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된 정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기에 비해 점차 외국법제동향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맞춤형 법제정보’를 토대로 주요 법제에 대한 동향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밖에 ‘외국법제연구’나 ‘Global Legal Issue’, ‘비교법 현안분석’, ‘글로벌 현안분석’에서도 건설분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으나 현재 해당 구분은 제외되어 ‘맞춤형 법제정보’와 ‘외국법제동향’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21〉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연도별-제공형태별 건수분석

연도	구분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 동향	외국법제 연구	Global Legal Issue	비교법 현안분석	글로벌 현안분석	기타*	합계
2007년	건설	11	4						15
	전체	32	33	9					74
2008년	건설	11	1	1					13
	전체	66	27	21					114
2009년	건설	7	2	6					15
	전체	47	27	29					103
2010년	건설	6	3						9
	전체	52	21	21				8	102
2011년	건설	7							7
	전체	31	22	24				8	85
2012년	건설	3			2				5
	전체	21	20		20			10	71
2013년	건설	1	4			2			7
	전체	17	22			17			56
2014년	건설	2	3				4		9
	전체	27	21				15		63
2015년	건설						2		2
	전체	16	13				12		41
2016년	건설	1							1
	전체	16	13					12	41
2017년	건설	4							4
	전체	19							19
2018년	건설	3	2						5
	전체	27	23						50
2019년	건설	4	2						6
	전체	23	25						48
2020년	건설		4						4
	전체	14	25						39
합계	건설	60	25	7	2	2	6		102
	전체	408	292	104	20	17	27	38	906

*기타 : 주요국가의 최신입법동향, 특집호, 기획특집, 글로벌 법제현안

마지막으로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조사건수가 많았던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키워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기간동안의 키워드에 대한 일정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초기에는 국가별 건축사제도나 건설관련 정부조직,

도시계획제도와 공공조달 및 토지보상 등 비교적 상위제도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나 에너지, 부동산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유비쿼터스나 상생협력, 리모델링 그리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설기준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표 3-22〉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주요 키워드 분석

연도	키워드
2007년	주택, 주거, 개발(전용)허가, 특별구역, 기후변화, 에너지, 건설기업관리, 건축(건축사), 건설조직
2008년	도시재생, 도시계획, 건축, 건축물, 도시경관, 공공조달, 토지보상, 예산집행
2009년	도로, 교통, 보상, 부동산, 에너지, 농지전용, 기후변화
2010년	친환경 건축, 엔지니어링, 기후변화, 시설기준, 개발, 건축(기술자), 에너지
2011년	부동산, 엔지니어링, 도로, 유비쿼터스
2012년	국토개발, 도로, 건축물 유지관리, 상생협력
2013년	주거복지, 시설기준, 기후변화, 부동산, 기반시설
2014년	교통, 부동산, 에너지, 건축사, 특별구역
2015년	부동산, 주택
2016년	리모델링
2017년	부동산, 시설기준, 안전관리, 공공조달
2018년	부동산, 에너지, 시설기준(실내공기질)
2019년	주택, 도시개발, 기반시설(물)
2020년	지역재생, 시설기준, 주택

3)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건설관련 정보는 ‘법령정보’, ‘연구보고서’, ‘법제동향’ 등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 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법령체계도’ 상에서 ‘국토개발, 건설’이나 ‘교통, 운송’, 그밖에 ‘조세’, ‘산업, 투자’, ‘경제, 금융’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건설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단, ‘법령체계도’에서는 국가별로 통일된 카테고리 안에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링크한 것으로, 자료의 번역 및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건설정보 제공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령정보’에서 OECD 가입된 중점관리대상국가를 대상으로 내용상의 ‘건설’관련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총 16개국 중 8개국의 법령정보에서 건설정보가 추출되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 2020년

과 2021년에 걸쳐 등록된 건설업법과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 관련 법률 3건이 조사되었다. 캐나다는 2010년에 등록된 터미널과 교량 및 터널 건설 관련법, 미국은 2021년에 등록된 핵폐기물 정책법과 2010년의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이 조사되었다. 칠레는 2019년에 등록된 부동산 건설관련 법률, 독일은 2021년에 등록된 소득세법과 연방공해방지법, 단체협약법이 조사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각각 2011년과 2016년에 등록된 1995 사회건설법과 1996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건축법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2011년에 등록된 건설노동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법률이 조사되었다. 각각의 건설관련 법률들은 조사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자료가 등록된 것으로, 국가별 건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요약이나 번역 또는 영문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있으나 대부분 해당국의 원어로 제공되고 있다.

〈표 3-23〉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의 건설관련 법률정보(OECD 가입국 중 중점관리대상국가)

국가	제목	등록일자	비고
일본	건설업법(建設業法)	2021.08.23.	
	건설노동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建設労働者の雇用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2021.02.18.	
	건설기계저당법(建設機械抵当法)	2020.01.08.	
캐나다	캐나다 국영철도회사에 의한 몬트리올 터미널 건설에 관한 법	2010.12.15.	
	부서빌섬 다리 및 터널건설법	2010.12.14.	
	버팔로 및 포트에리 공용다리건설회사법	2010.12.14.	
미국	핵폐기물 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2021.05.24.	번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2009)	2010.12.14.	
칠레	영세기업 및 사회적 설비를 위한 부동산 건설에 관한 법률 (Ley 20563, Regulariza construcción de bienes raíces destinados a microempresas y equipamiento social)	2019.11.13.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2021.10.18.	
	연방공해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2021.09.29.	번/영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2021.06.21.	요/번/영
영국	1996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건축법 (Housing Grants,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 1996)	2016.06.29.	
	1995 사회건설법	2011.03.18.	
스위스	비전리 방사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sur la protection contre le rayonnement non ionisant)	2018.07.16.	번
	송전선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sur les lignes électriques)	2018.07.11.	번
오스트리아	건설노동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법률	2011.03.04.	

자료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소결

본 장에서는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분야별·국가별 건설제도를 재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OVICE의 15개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와 ‘해외진출 가이드북’의 건설제도 정보현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78개국 ‘국별환경’ 정보 중 OECD 가입국인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칠레를 대상으로 건설제도 정보현황을 알아보았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글로벌 건설제도를 ‘건설업 면허제도’,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관련 제도’, ‘건설공사 예산편성 및 원가계산 제도’, ‘건설공사 발주제도’, ‘건설업체 선별 및 입찰제도’, ‘건설보증제도’, ‘건설공사 낙찰제도’,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 ‘건설공사 첨단신기술 도입제도’의 총 9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 해당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유럽연합의 건설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와 비교하였다.

OVICE에서는 15개국을 거점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 ‘미국정보 종합가이드’로 구분하여 건설분야의 종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정보 종합가이드’는 크게 ‘핵심정보 활용안내’와 ‘연방정부 Indicator’, ‘민간기구 Indicator’로 분류되어 있다. 핵심정보 활용안내에서는 건설보증제도, 건설관련 법체계, 시방서, 연방 건설조달 및 관련 표준 양식과 규정, 친환경 인증제도, 건설안전 정책, PPP제도 그리고 건축물 관련 코드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Indicator에서는 조달시스템, CODE 시스템, GSA LEED 어플리케이션, 연방정부(미국)의 그린건축물 인증 시스템 등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계약유형별 일반지침, 설계 가이드, 기술지침서 등 세부지침을 제공한다. 민간기구 Indicator는 건설산업 마스터시방서,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17 공공인프라 평가카드, 미국건설산업 표준분류시스템, 미국 건축가협회(AIA)·EJCED·DBIA의 계약문서 등 민간분야의 기준이 제공된다. 해당 항목의 정보내용은 간단한 개요의 설명과 함께 목차가 번역된 원문자료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미국을 제외한 14개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 가이드북은 건설·ENG 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건설·ENG 관련 세법, 금융환경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요 건설제도 정보는 건설업면허·허가제도, 보증제도, 입찰제도 및 관련 세법 등이 제공된다. 14개 거점국가가 모두 동일한 분류체계로 구

성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구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생성 및 갱신 일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78개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국별환경'의 '건설시장현황'에서 '건설업제도'를 소분류하여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제도정보는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도급한도·등급제도, 입찰제도, 보증제도, 시공관리제도, 부동산절차 등으로 세부 분류된다. 영국과 캐나다, 칠레에 대한 건설제도정보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국가별 정보들은 동일한 분류체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 내용의 구성은 다르게 제공되고 있었다. 영국의 정보내용이 가장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캐나다가 가장 적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정보는 공통일과 최근 등록일,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어 자료의 생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갱신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OVICE의 경우에는 15개 거점기관 중 OECD 3개국(미국, 터키, 콜롬비아)과 12개 개도국에 대한 세부적인 해외진출 종합정보와 함께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OECD 11개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국가별 종합정보와 함께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24〉 주요기관의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구분	1차년도 연구	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분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면허제도 •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관련 제도 • 건설공사 예산편성 및 원가계산 제도 • 건설공사 발주제도 • 건설업체 선별 및 입찰제도 • 건설보증제도 • 건설공사 낙찰제도 •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 • 건설공사 첨단신기술 도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보증제도 • 건설관련 법체계 • 건설조달제도(입찰제도) • 건설 관련 세제 • 친환경건설제도 • 건설안전관리제도 • PPP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허가제도 • 지사설치제도 • 도급한도·등급제도 • 입찰제도 • 보증제도 • 시공관리제도 • 부동산절차제도
대상국가	최대 OECD 5개국 (+EU)	15개 거점국가 (OECD 3개국)	총 78개국 (OECD 11개국)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동향은 앞서 조사된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제공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등록되는 국가별 정보현황과 자료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건

설기술연구원에서 관리하는 OVICE의 '주제별 정보'내 '건설 법령 및 제도'에 등록되는 건설제도정보를 국가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되고 있는 최신외국법제정보를 통해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동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법령정보원에서 관리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령정보'에서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등록된 정보를 검토하였다.

OVICE의 '주제별 정보'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건설 법령 및 제도'를 검색한 결과에서 폴란드, 터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미국의 총 6개국에 대한 건설제도정보가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주제별 정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의 형태는 해당 국가의 제도를 원어형태 또는 영어나 한글로 제공되고 있다. 자료출처는 해당 국가의 기관이나 국제기관, 대사관 등이며, 자료 생성은 2017년과 2018년이 대부분이나 자료의 발행일은 1990년대부터 매우 다양했다.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제공이 아닌 국가별 조사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이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등 국내 기관의 정보도 연계되어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최초 발간된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주제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도별로 건설분야 관련 주제를 정리한 후 연도별·국가별 건수, 연도별·제공형태별 건수, 연도별 주요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신외국법제정보에서 제공되는 주제의 건수는 감소되는 추세로 건설관련 제도정보도 감소하였다. 전체 건수 대비 건설관련 건수는 평균 11.3%이며, 일본이 34건,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OECD 국가와 가나,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개도국까지 다양한 국가가 포함되었다. 제공형태별로는 '맞춤형 법제정보'가 총 102건 중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법제동향'은 25건으로 나타나 건설제도는 외부의 요청에 의해 조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키워드는 전체기간동안 다양하게 나타나 일정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 초기에는 국가별 건축법, 건축사제도, 건설조직, 도시계획제도, 공공조달 및 토지보상과 같은 비교적 상위제도에 대한 주제가 많이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나 에너지, 부동산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정 시기에 상생협력이나 리모델링,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설기준 등의 주제를 담고 있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조사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55개 중점관리대상국가 중 16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건설' 관련 키워드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캐나다, 미국,

칠레, 독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총 8개국의 17개 건설정보가 검색되었다. 각각의 건설관련 제도들은 특정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등록된 것으로, 국가별 건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제공형태도 일부 요약이나 번역 또는 영문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있으나 대부분은 해당국의 원어로 제공되는 상황이다.

이상의 주요기관별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동향을 살펴보면, OVICE ‘주제별 정보’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정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기관의 경우에 관련 정보의 제공은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국내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정보를 등록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는 원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경우에는 국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되는 정보 또는 자체적인 조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보로 한글로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생성의 경우에 OVICE는 연 1회 정도로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최신외국법제정보는 매년 주제 선정에 따라 생성,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수시로 자료를 등록하는 형태이다. 세 개의 기관 모두 건설제도의 세부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추가로 각 기관별로 조사된 OECD 국가는 OVICE 6개국, 최신외국법제정보 8개국, 세계법제정보센터 8개국이다.

〈표 3-25〉 주요기관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동향

구분	OVICE	최신외국법제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출처구분	• 주제별 정보	• 맞춤형 법제정보 • 외국법제동향 등	• 법령정보
언어	• 원어, 영어, 한글	• 한글	• 원어, 영어, 한글
생성기간	• 2017년~2018년 • 연 1회 주기적 생성	• 2007년~2020년 • 매년 주제 선정	• 2010년~2021년 • 수시 자료 등록
조사방법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 • 국내 관련기관	• 현지 국내인력 • 내부 담당자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
주요특성	•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조사된 자료 등록	•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사 • 내부 조사계획에 따른 주제 선정	•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조사된 자료 등록
조사된 OECD 국가	폴란드, 터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미국 (OECD 6개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호주 (OECD 8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칠레, 독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OECD 8개국)

IV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1.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
2.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1.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

1)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의 주요 내용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해외 건설종합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외국법제정보,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 그리고 그밖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국제협력단(KIND),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련 정보를 검토하였다.

OVICE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 중이며, 해외정보수집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거점국가에 대한 글로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OVICE의 건설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하나는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가이드북과 미국 정보 종합가이드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정보이다. 가이드북에서는 해당 국가의 건설업면허·허가제도, 입찰제도, 보증제도 등 건설·ENG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주제별 정보에서는 건설 법령 및 제도가 구분되어져 있고, 해당 분류에서 건설법령과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투자, 조달, 인허가, 입찰 관련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단, 주제별 정보의 경우에 각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국내 관련기관의 자료가 제공되는 형태로 추가적인 정보의 정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해외건설협회 회원의 해외건설 활동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요 정보로는 총 78개국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 국별환경, 시장동향, 수주통계, 진출지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건설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국별환경'의 '건설시장현황'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하여 '건설업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건설업제도는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도급한도·등급, 입찰제도, 보증제도, 시공관리제도, 부동산 절차를 포함한다. 각각의 정보는 지역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다.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는 55개 중점관리대상국가지역·기구에 대한 글로벌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크게 법령정보와 법령체계를 통해 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법령정보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국가별 건설정보를 찾을 수 있다. 법령체계도는 각 국가의 주요법률을 주제별로 카테고리화하여 건설분야의 제도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국내외 기관의 자료를 등록한 것이고, 법령체계도의 제도정보는 해당 국가의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정보를 검색하도록 되어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국내외 입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신외국법제정보는 현재 맞춤형 법제정보와 외국법제동향으로 구분되어 연 5~6회 발간된다. 맞춤형 법제정보는 외부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행되어 2020년 이후 1호 당 3개의 주제가 포함되며, 외국법제동향은 연구원의 자체적 주제선정을 통해 1호당 4~6건의 주제가 포함된다. 건설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제도가 포함되며, 해당 국가의 학교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국내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RICE)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건설제도를 포함한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제공하였다. 2007년부터 대폭 개편되어 「건설경제리포트」에 해외 건설시장 자료를 포함하여 발간되는 수준으로 제공되다가, 2015년부터는 홈페이지에 “해외 건설시장”을 따로 구분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MENA 지역의 건설투자 추이를 게재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가 중심이기는 하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MENA 지역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고 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해외사업정보는 OVICE의 주제별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KOICA 개발협력 오픈 데이터 포털”은 KOICA 주요 협력국별 데이터 및 사업정보와 개발협력 주요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정보는 KOICA 협력대상국별 개발협력 데이터 및 KOICA 사업 현황 등이며, 협력대상국은 총 49개국으로 OECD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의 주요 정보는 무역투자통계, 국가별 시장정보, 품목별 유망시장, 기업별 맞춤정보, 잠재파트너 정보이다. KOTRA의 글로벌 정보는 무역투자의 진흥을 위한 국가별 시장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정보제공 기관을 비교해보면, OVICE는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건설제도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나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타기관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건설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가 일부 OECD 국가를 포함한 총 78

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세부적인 제도정보를 제공하나 건설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 건설제도만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기관별 조사방법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의 거점국가와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가 내부 담당자를 두어 조사되는 형태이며, “최신외국법제정보”는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이다.

2) 글로벌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의 주요 내용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 분석은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에서 검토된 기관 중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외국법제정보에 제공되는 건설제도의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1차년도 과제와 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을 정리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글로벌 건설제도를 ‘건설업 면허제도’, ‘건설사업 수행절차 및 관련 제도’, ‘건설공사 예선편성 및 원가계산 제도’, ‘건설공사 발주제도’, ‘건설업체 선별 및 입찰제도’, ‘건설보증제도’, ‘건설공사 낙찰제도’,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 ‘건설공사 첨단신기술 도입제도’의 총 9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각의 분야에 해당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유럽연합의 건설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와 비교하였다.

OVICE에서는 15개국을 거점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 ‘미국정보 종합가이드’로 구분하여 건설분야의 종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정보 종합가이드’는 크게 ‘핵심정보 활용안내’와 ‘연방정부 Indicator’, ‘민간기구 Indicator’로 분류되어 있다. 핵심정보 활용안내에서는 건설보증제도, 건설관련 법체계, 지방서, 연방 건설조달 및 관련 표준 양식과 규정, 친환경 인증제도, 건설안전 정책, PPP제도 그리고 건축물 관련 코드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Indicator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계약유형별 세부지침을, 민간기구 Indicator는 민간분야의 건설관련 세부기준이 제공된다. 미국을 제외한 14개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 가이드북은 건설·ENG 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건설·ENG 관련 세법, 금융환경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요 건

설제도 정보는 건설업면허·허가제도, 보증제도, 입찰제도 및 관련 세법 등이 제공된다. 14개 거점국가가 모두 동일한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구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생성 및 갱신 일자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의 생성 및 갱신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78개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국별환경’의 ‘건설시장현황’에서 ‘건설업제도’를 소분류하여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제도정보는 면허·허가제도, 지사설치제도, 도급한도·등급제도, 입찰제도, 보증제도, 시공관리제도, 부동산절차 등으로 세부 분류된다. 영국과 캐나다, 칠레에 대한 건설제도정보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정보들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분류체계 및 세부 내용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제공정보는 개통일과 최근 등록일, 담당자가 기재되어 있어 자료의 생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갱신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OVICE는 15개 거점기관 중 OECD 3개국(미국, 터키, 콜롬비아)과 12개 개도국에 대한 세부적인 해외진출 종합정보와 함께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건설제도는 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입찰제도를 포함한 조달제도와 건설안전제도, 건설관련 법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건설제도와 PPP제도 등 미국의 주요 벤치마킹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OECD 11개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국가별 종합정보를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와 유사한 건설제도 분류체계(면허·허가, 지사설치, 도급한도·등급, 입찰, 보증, 시공관리, 부동산절차)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동향과 관련하여 OVICE의 ‘주제별 정보’, 최신외국법제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OVICE의 ‘주제별 정보’에서는 OECD 가입국인 폴란드, 터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미국의 총 6개국에 대한 건설제도정보가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OVICE의 ‘주제별 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의 제도를 원어형태 또는 영어나 한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 자료출처는 해당 국가의 기관이나 국제기관, 대사관 등이며, 자료 생성은 2017년과 2018년이 대부분이나 자료의 발행일은 1990년대부터 매우 다양했다.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제공이 아닌 국가별 조사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이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등 국내 기관의 정보도 연계하고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로 건설분야 관련 주제를 정리한 후 연도별·국가별 건수, 연도별·제공형태별 건수, 연도별 주요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신외국법제정보에서 제공되는 주제의 건수는 감소되는 추세로 건설관련 제도정보도 감소하였다. 전체 건수 대비 건설관련 건수는 평균 11.3%이며, 일본이 34건,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캐나다, 스위스, 호주 등 OECD 국가와 가나,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개도국까지 다양한 국가가 포함되었다. 제공형태별로는 '맞춤형 법제정보'가 총 102건 중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법제동향'은 25건으로 나타나 건설제도는 외부의 요청에 의해 조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설분야 관련 주제의 키워드는 전체기간동안 다양하게 나타나 일정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조사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55개 중점관리대상국가 중 16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건설' 관련 키워드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캐나다, 미국, 칠레, 독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총 8개국의 17개 건설정보가 검색되었다. 각각의 건설관련 제도들은 특정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등록된 것으로, 국가별 건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제공형태도 일부 요약이나 번역 또는 영문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있으나 대부분은 해당국의 원도로 제공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동향에서는 OVICE '주제별 정보'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정보가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다. 두 기관의 경우에 관련 정보의 제공은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국내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정보를 등록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는 원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경우에는 국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되는 정보 또는 자체적인 조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보로 한글로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생성의 경우에 OVICE는 연 1회 정도로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최신외국법제정보는 매년 주제 선정에 따라 생성,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수시로 자료를 등록하는 형태이다. 세 개의 기관 모두 건설제도의 세부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추가로 각 기관별로 조사된 OECD 국가는 OVICE 6개국, 최신외국법제정보 8개국, 세계법제정보센터 8개국이다.

3)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

이상의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과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을 통해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글로벌 건설제도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OVICE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경우에는 건설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안에서 국가별 건설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신외국법제정보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글로벌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제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제도를 포함한다.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의 경우에도 건설제도를 포함한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국가들이 제공기관별로 상이하다. OVICE는 15개 거점기관 중 OECD 3개국(미국, 터키, 콜롬비아)과 12개 개도국에 대한 가이드북이 제공되고 있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OECD 11개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의 55개 중점관리대상국가지역·기구 중 OECD 가입국은 16개 국가이다.

셋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국가별 정보의 구성과 내용이 다르다. OVICE의 경우에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가이드북과 모든 국가에 대한 국내외 관련기관의 연계자료를 제공한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총 78개국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정보를 제공하며,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선정된 국가와 주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55개 중점관리대상국가지역·기구를 대상으로 국내외 관련기관의 연계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기관별로 다른 분류기준에 의해 글로벌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1차년도 결과에서는 글로벌 건설제도를 총 9개 분야로 분류하여 관련 제도를 정리하였고, OVICE의 경우에는 15개 거점국가의 가이드북을 통해 7개 분야로 건설제도를 분류하여 제공한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총 78개국에 대한 건설제도를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VICE의 주제별 정보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건설제도는 세부 카테고리 분류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와 언어가 상이하다. OVICE의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가이드북과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78개국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한글로 제공된다. 그러나 OVICE의 주제별 정보나 세계법제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정보는 국가별로 키워드 검색 등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야 하는 형태이다. 또한 국가

별 특정목적에 따라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국내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정보를 등록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정보는 원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경우에는 국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되는 정보 또는 자체적인 조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보로 한글로 제공되고 있다.

여섯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글로벌 정보는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 일정 카테고리로 구분된 건설제도정보가 한글로 정리되어 제공된다. OVICE의 거점국가, 해외 건설종합정보서비스, 최신외국법제정보가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 두 번째, 자체적으로 수행된 자료와 국내외 기관의 글로벌 건설제도 관련 자료를 간단한 요약이나 목차와 함께 첨부파일로 등록되는 형태이다. OVICE의 주제별 정보와 세계법제정보의 법령정보가 해당된다. 세 번째, 국가별 건설제도를 일정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정보제공기관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형태이다. 세계법제정보의 법령체계도와 OVICE의 주제별 정보가 해당된다.

일곱째, 제공되는 건설제도정보의 생성 및 갱신 일자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해외 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정보의 개통일과 최근 등록일이 기재되어 있어 자료의 생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갱신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OVICE의 해외진출가이드북은 정보의 생성 및 갱신 일자가 제공되지 않으며, 주제별 정보는 연 1회 정도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상황이다. 최신외국법제정보는 매년 주제 선정에 따라 생성되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수시로 자료가 등록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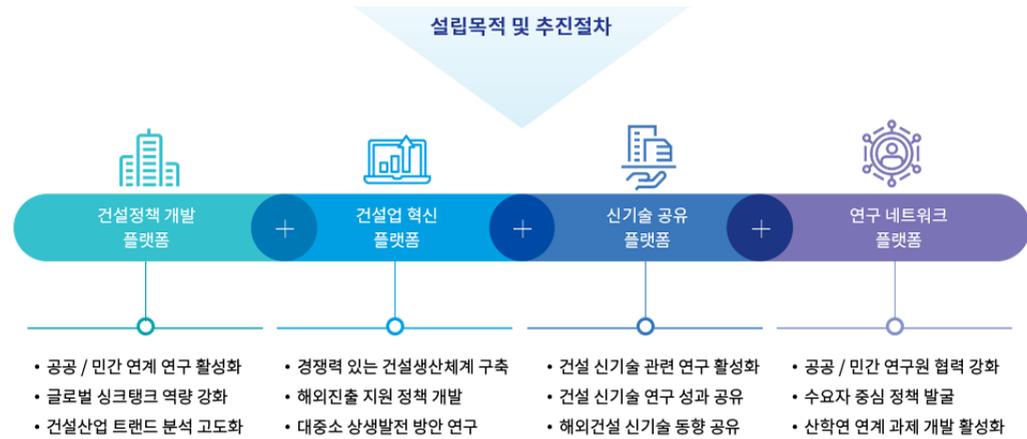
〈표 4-1〉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
첫째, 글로벌 건설제도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재함
둘째, 글로벌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국가들이 제공기관별로 상이함
셋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국가별 정보의 구성과 내용이 다름
넷째, 기관별로 다른 분류기준에 의한 글로벌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됨
다섯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와 언어가 상이함
여섯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글로벌 정보는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됨
① 한글로 정리된 자료, ② 요약/목차 + 파일첨부, ③ 정보제공기관 링크
일곱째, 정보의 생성 및 갱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2.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1) RICON의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 현황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은 건설산업 및 전문건설업 분야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건설기술 향상 그리고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생산체계 개편 등 정책개발과 비효율적인 제도의 개선, 전문건설업의 업역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노동환경변화의 대응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영개선 등 전문건설 권익보호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정책을 개발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글로벌 건설제도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 및 제도 분석과 진출전략 등도 연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연구원의 비전을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정하고 ‘건설업 혁신 플랫폼’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정책 개발, ‘신기술 공유 플랫폼’을 위한 해외신기술 동향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 :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 홈페이지(www.ricon.re.kr/).

[그림 4-1] RICON의 비전 추진절차

특히, 2019년 12월부터는 홈페이지의 ‘동향 & 이슈’를 통해 해외정보를 ‘정책’과 ‘시장’, ‘칼럼’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월까지 ‘정책’정보 총 28건, ‘시장’정보 총 73건, ‘칼럼’정보 총 43건이 게시되어 있다. 각각의 카테고리별 주제는 <표 4-2>에서 <표 4-4>와 같다. ‘정책’ 정보에서는 건설기술이나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수소경제,

그린리모델링, 기후변화, 코로나 이후의 건설 등 거시적 건설정책과 건설공사 대금시스템, 시공책임형 CM 법제화, LEED 등 미시적 건설정책·제도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4-2〉 RICON 홈페이지 '동향 & 이슈'의 해외 '정책' 정보

NO	일자	'정책' 정보의 주제
1	2019/12/23	싱가포르 HDB 공공주택 기술혁신 정책 동향
2	2020/01/16	홍콩 주택청(HA: Housing Authority) 공공주택 기술혁신 정책 동향
3	2020/02/18	중남미 해외건설 시장 진출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
4	2020/04/08	호주 멜버른(Melbourne)의 민간 주도 사회주택 공급모델 및 관련 도시재생 정책
5	2020/04/08	ADB(아시아개발은행)의 COVID-19 대응 및 개발회원국 해외진출 지원정책
6	2020/05/20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건설산업과 건설정책의 변화 방향
7	2020/06/04	영국의 High Speed(HS2) 사업추진 정책 동향과 시사점
8	2020/07/01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중남미 국가별 건설정책 동향
9	2020/08/12	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동향-①(프랑스, 독일)
10	2020/08/19	건축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사례
11	2020/09/04	하수도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살펴본 일본의 건설분야 기술개발 지원 정책
12	2020/09/22	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동향-②(캐나다, 미국)
13	2020/10/14	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동향-③(중국 칭따오)
14	2020/11/02	주요국의 수소경제 추진 전략
15	2020/11/25	최근 영국의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6	2020/12/03	프랑스의 건설공사 실적분류체계, 건축의 QUALIBAT, 토목의 FNTP
17	2021/01/06	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에 관한 영국 등 PBA 운영 사례 고찰
18	2021/02/10	바이든 정부의 건설 분야 정책 방향: Build Back Better
19	2021/03/15	주요국의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법제화 현황
20	2021/04/05	주요국의 국토·도시 디지털 트윈 정책 동향 및 시사점(싱가포르, 영국, 호주)
21	2021/04/09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중소기업 정책방향 비교(한국미국일본-EU-프랑스-영국)
22	2021/05/12	美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과 전망
23	2021/05/26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신기술 활용 시스템 NETIS
24	2021/07/16	주요국 인공지능(AI)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5	2021/08/23	러시아 그린에너지 정책 등 현황 및 협력적 시사점
26	2021/10/06	녹색 건축인증제도(LEED v4.1β) 최신 동향 및 글로벌 친환경 정책 방향
27	2021/11/25	사이버물리시스템의 해외 주요국 정책 및 사례 - 싱가포르, 미국, 영국 -
28	2022/01/26	도로 건설산업의 새로운 혁명

〈표 4-3〉 RICON 홈페이지 ‘동향 & 이슈’의 해외 ‘시장’ 정보

NO	일자	‘시장’ 정보의 주제
1	2019/12/23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19.11.25~19.12.05)
2	2019/12/23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19.12.06~19.12.20)
3	2019/12/31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19년 12월 기준)
4	2020/01/06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19.12.23~20.01.03)
5	2020/01/21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1.06~20.01.17)
6	2020/01/31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년 1월 기준)
7	2020/02/04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1.20~20.01.31)
8	2020/02/18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2.03~20.02.14)
9	2020/03/03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2.17~20.02.28)
10	2020/03/05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년 3월 기준)
11	2020/03/18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3.02~20.03.13)
12	2020/03/30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3.16~20.03.26)
13	2020/04/08	중국의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수요 전망
14	2020/04/14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3.30~20.04.09)
15	2020/04/14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년 4월 기준)
16	2020/04/27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4.13~20.04.23)
17	2020/05/19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4.27.~20.05.14.)
18	2020/05/20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년 5월 기준)
19	2020/06/01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5.18.~20.05.28.)
20	2020/06/01	글로벌 A/E 기업의 해외매출액 분석 결과 및 해외경쟁력 강화의 시사점
21	2020/06/16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6.01.~20.06.11.)
22	2020/06/22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년 6월 기준)
23	2020/07/08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6.22.~20.07.02)
24	2020/07/23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0.07.06~20.07.16)
25	2020/07/29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년 7월 기준)
26	2020/08/05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0.07.20~20.07.30)
27	2020/08/19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0.08.03~20.08.13)
28	2020/09/03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0.08.17~20.08.27)
29	2020/09/10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년 9월 기준)
30	2020/09/17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0.08.31~20.09.10)
31	2020/10/05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09.14~10.01)
32	2020/10/11	해외 플랜트건설 시장 및 기술 동향
33	2020/10/11	코로나19 이후 중동지역 시장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진출전략 (1)
34	2020/10/26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10.05~10.15)
35	2020/11/05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10.19~10.29)
36	2020/11/17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11.02~11.12)

NO	일자	'시장' 정보의 주제
37	2020/12/03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11.16~11.26)
38	2020/12/03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년 12월 기준)
39	2020/12/16	2021년 미국 건설시장 전망 및 이슈
40	2020/12/24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11.30~12.10)
41	2021/01/04	코로나19 이후 중동지역 시장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진출전략 (2)
42	2021/01/07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0.12.14~20.12.31)
43	2021/01/21	주요국 목재시장 동향 - 구조용집성판(CLT)
44	2021/02/02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1.01.04~21.01.28)
45	2021/02/03	최근 베트남 인프라 건설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2021년 전망)
46	2021/02/26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21.02.01~21.02.25)
47	2021/03/22	일본 부동산 버블과 영국 주택시장 상황
48	2021/04/02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3.01~21.03.26)
49	2021/04/02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3.01~21.04.01)
50	2021/04/27	글로벌 OSC(Off-SiteConstruction)시장 주력기업 동향
51	2021/05/03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4.01~04.25)
52	2021/05/07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4.05~21.04.29)
53	2021/06/01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5.10~21.05.27)
54	2021/06/02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5.01~21.05.28)
55	2021/06/28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6.01~21.06.25)
56	2021/07/02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5.31~21.06.30)
57	2021/08/04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7.01~21.07.30)
58	2021/08/09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7.05~21.07.29)
59	2021/08/09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60	2021/09/02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8.02~21.08.26)
61	2021/09/02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8.02~21.08.30)
62	2021/10/01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8.30~21.09.30)
63	2021/10/02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09.01~21.09.27)
64	2021/10/15	우즈베키스탄 건설산업 및 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
65	2021/10/29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10.04~21.10.29)
66	2021/11/01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10.01~21.10.31)
67	2021/12/03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11.01~21.11.30)
68	2021/12/20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11.01~21.11.30)
69	2022/01/05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21.12월)
70	2022/01/10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1.12.01~21.12.31)
71	2022/01/30	22.01. 건설관련 해외 원자재 동향
72	2022/02/04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22.1월)
73	2022/02/18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표 4-4〉 RICON 홈페이지 ‘동향 & 이슈’의 해외 ‘칼럼’ 정보

NO	일자	‘칼럼’ 정보의 주제
1	2019/12/2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가포르의 건설안전제도
2	2019/12/23	KPMG(미국)의 미래준비지수(Future-Ready Index) 개발 및 활용 사례
3	2020/01/09	베트남 건설시장 분야별 전망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
4	2020/01/22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5	2020/01/31	미국 CES 2020에 소개된 건설관련 기술
6	2020/03/05	미국 2020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 트렌드 전망
7	2020/03/18	2020년 독일의 건설산업 이슈와 트렌드
8	2020/03/30	Mckinsey가 본 글로벌 시장의 모듈러건축 - 1
9	2020/04/16	Mckinsey가 본 글로벌 시장의 모듈러건축 - 2
10	2020/04/23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를 통해 보는 미래도시계획방향
11	2020/05/20	독일 스마트시티의 현 주소와 전망
12	2020/06/0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도시 구축 가속화와 일본 스마트타운 사례
13	2020/07/0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독일의 건설산업
14	2020/07/16	OECD 국가들의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체계
15	2020/07/22	미국 Off-Site Construction 산업의 최근 동향
16	2020/08/26	북유럽 3개국의 주택시장 취약성 평가체계 및 주택금융 정책
17	2020/09/03	기후변화와 유럽 주요국 건설산업의 대응
18	2020/09/15	주요국의 재난 로봇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
19	2020/10/06	디지털 뉴딜과 EU 건설산업의 스마트시공 4대 Trend
20	2020/10/19	베트남의 첫 PPP 법률 제정, 인프라 투자에 날개를 달 것인가?
21	2020/11/11	OECD 국가들의 건설투자 적정성 비교
22	2020/12/16	주요국 도시재생(일본 타운매니지먼트, 미국 CBA) 사례 및 시사점
23	2021/01/04	중국 제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시사점
24	2021/02/17	우즈베키스탄 국가 건설기준 현대화 추진 사례 : 한-우즈벡 공동프로젝트
25	2021/03/05	주요국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사례 및 시사점
26	2021/03/09	미국의 건설산업 표준계약서: ConsensusDOCS
27	2021/04/15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선 미국의 도시정책
28	2021/05/03	해외 국가간 경제특구 개발협력 사례 및 시사점(베트남, 미얀마)
29	2021/06/01	코로나19가 미국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30	2021/06/10	네덜란드 로테르담, 민관협력의 도시재생
31	2021/06/18	美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2	2021/07/05	신흥국 인프라 PPP 사업의 성공적 발굴과 추진을 위한 EDCF 활용방안
33	2021/07/20	주민이 지키는 지역가치, 교도가 재생하는 방법
34	2021/07/27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지원 방안
35	2021/08/13	주요국의 도시공간 및 건축물 목조화 사례와 관련 산업동향
36	2021/09/14	긴 호흡의 스마트 도시재생,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37	2021/09/28	북한의 SDGs 이행성과와 국제사회의 지원과제
38	2021/10/08	주요국 글로벌 기업들의 건설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현황
39	2021/10/28	한눈에 보는 일본 종합상사의 수소산업
40	2021/11/02	McKinsey가 진단한 글로벌 건설산업의 탈탄소 전략
41	2021/11/25	뉴노멀 시대, 1분 도시(One-Minute City)의 탄생#스웨덴
42	2021/12/15	COVID-19 이후 건설장비 OEM의 전망
43	2022/02/28	우크라이나 이슈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또한 '정책' 정보에서 제공되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8건, 일본이 4건, 프랑스·호주·싱가포르가 3건, 중남미와 EU가 2건, 그밖에 캐나다·홍콩·중국·독일·러시아 등이 1건으로 나타났다.

'시장' 정보에서는 일본과 영국, 베트남의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 미국 건설시장이나 글로벌 OSC에 대한 정보와 최근 요소수 등 대란 등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자재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칼럼' 정보에서는 건설안전, 건설산업 트렌드, 모듈러건축, 미래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재난관리체계, OSC, 주택금융, 기후변화, 디지털 뉴딜, 도시재생, PPP제도, 남북협력 등 건설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더불어 정보제공 국가들도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북유럽,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현재 RICON의 해외 동향과 이슈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책, 시장, 칼럼의 정보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쌓여갈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분류체계 이하에 세부 분류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 시장, 칼럼의 정보에서도 건설제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도분야에 대한 추가 분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의 시사점과 RICON의 해외정보 제공현황을 토대로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에 대한 사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과 RICON의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현황을 바탕으로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건설제도에 대한 글로벌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종합적인 건설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환경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건설제도를 일부 포함하는 수준이다.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기관에서는 건설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기관에서 제공되는 건설정보와의 차이점을 갖고,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설제도에 대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OECD 등 선진국의 건설제도와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건설제도정보를 이원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도 초기에는 미국과 유럽 건설정보에 집중하였으나 현재에는 해외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MENA 지역에 대한 건설정보의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건설제도 정보구축에는 정보의 활용목적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선진국의 건설제도의 경우는 국내 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며, 개도국의 건설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목적을 두어 조사되어야 한다. 현재 OVICE는 15개 거점국가에 대하여 '미국정보 종합가이드'와 14개국에 대한 '해외진출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건설제도의 경우에 전반적인 제도체계와 더불어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제도를 조사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의 건설제도는 중소기업의 초기 해외진출을 위한 입찰도급계약보증제도 등과 시공과정에서 국가별로 유의해야할 제도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이원화

구분	선진국 건설제도	개도국 건설제도
조사목적	• 국내 제도의 글로벌화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조사내용	• 국내 제도와외 차이점 • 유사제도의 개정사항 등	• 입찰도급계약보증제도 • 시공 상의 유의제도 등
기대효과	•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건설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셋째,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OVICE, KIND,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에서는 타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정보를 구축 제공하고 있다.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OVICE의 경우에 15개 거점기관 중 OECD 3개국(미국, 터키, 콜롬비아)과 12개 개도국에 대한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또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OECD 11개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한다.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와 연계하여 건설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정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서는 78개국에 대한 건설제도를 면허·허가제도부터 부동산절차

제도까지 크게 7가지 분류로 나누어 제공된다. 따라서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1차년도에 도출한 9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보가 구축관리되어야 한다. 정보의 형태도 원어, 영어, 한글이 혼재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를 고려하여 한글 요약자료가 제시되고 관련 자료는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별 관련기관이나 자료의 발행기관 등도 링크시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러한 정보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제공되어야 다양한 정보의 제공에 혼선이 없을 것이다.

다섯째, 전문건설업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협회와 협조하여 해외국가 건설제도에 대한 Needs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요청된 국가 및 주제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학생 또는 연구기관 등 조사가능 인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조사인력을 확보한 후 해당 주제에 대한 조사협의 등을 통해 최종 주제를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도별 전문건설업 맞춤형 해외 건설제도의 조사주제를 선정하고 홈페이지 및 보고서로 발간한다.



[그림 4-2] 전문건설업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절차

여섯째, 플랫폼 형태의 정보 제공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대한 국가별 건설제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정보를 갱신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요국에 대한 기본적인 건설제도정보를 통일된 분류기준을 통해 제공하고 갱신되는 자료를 추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갱신정보는 분류기준별 주요 갱신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고, 내·외부 연구자료 및 학회 등의 자료를 첨부 또는 링크시키는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수집자도 정보의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댓글이나 자료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RICON의 '해외 동향과 이슈'의 정보제공 분류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 시장, 칼럼의 세 분류를 통해 정보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정보의 구성을 고려하여 세부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 분야를 분류기준에 추가하여 주요국에 대한 건설제도 정보와 기존의 정책, 시장, 칼럼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제도 및 외부 기관의 연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6〉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
첫째, 건설제도에 대한 글로벌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마련
둘째, 선진국의 건설제도와 개도국 건설제도 정보의 이원화가 필요
셋째,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적극 활용
넷째,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정보 구축 및 제공
다섯째, 전문건설업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사업 도입
여섯째, 플랫폼 형태의 정보 제공 및 개정이 필요
일곱째, RICON의 '해외 동향과 이슈'의 정보제공 분류체계의 개정

V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2. 연구의 활용방안

1.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OECD 등 주요 국가의 건설제도 비교·검토하여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2개년도 연구로 계획하여, 1차년도에는 OECD 등 주요 국가의 건설제도와 국내 건설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건설제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과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현황 및 제공동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외국법제정보,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 그리고 그밖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련 정보를 검토하였다. OVICE는 15개 거점국가에 대한 건설제도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나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타기관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건설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가 일부 OECD 국가를 포함한 총 78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세부적인 제도정보를 제공하나 건설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 건설제도만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기관별 조사방법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의 거점국가와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가 내부 담당자를 두어 조사되는 형태이며, “최신외국법제정보”는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이다.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 분석은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에서 검토된 기관 중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외국법제정보에 제공되는 건설제도의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1차년도 과제와 OVICE,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건설제도 정보제공 현황을 정리하였다. 1

차년도 연구에서는 글로벌 건설제도를 총 9개 분야로 나누어 주요 5개국에 대한 건설제도를 현황을 분석하였다. OVICE는 15개 거점기관 중 OECD 3개국(미국, 터키, 콜롬비아)과 12개 개도국에 대한 세부적인 해외진출 종합정보와 함께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건설제도는 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입찰제도를 포함한 조달제도와 건설안전제도, 건설관련 법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건설제도와 PPP제도 등 미국의 주요 벤치마킹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는 OECD 11개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국가별 종합정보를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와 유사한 건설제도 분류체계(면허허가, 지사설치, 도급한도등급, 입찰, 보증, 시공관리, 부동산절차)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야별 정보제공 동향과 관련하여 OVICE의 '주제별 정보', 최신외국법제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OVICE '주제별 정보'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정보가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다. 두 기관의 경우에 관련 정보의 제공은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국내 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정보를 등록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는 원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에 최신외국법제정보의 경우에는 국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되는 정보 또는 자체적인 조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보로 한글로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생성의 경우에 OVICE는 연 1회 정도로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최신외국법제정보는 매년 주제 선정에 따라 생성,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수시로 자료를 등록하는 형태이다. 세 개의 기관 모두 건설제도의 세부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국가별 특정목적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이상의 글로벌 건설정보 구축 및 제공 현황과 건설제도 분야별 정보제공 현황 및 동향을 통해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첫째, 글로벌 건설제도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재하다.
- 둘째, 글로벌 건설제도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국가들이 제공기관별로 상이하다.
- 셋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국가별 정보의 구성과 내용이 다르다.
- 넷째, 기관별로 다른 분류기준에 의해 글로벌 건설제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다섯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정보의 형태와 언어가 상이하다.
- 여섯째, 기관별로 제공되는 글로벌 정보는 세 가지의 형태³⁾로 구분된다.
- 일곱째, 정보의 생성 및 갱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3) ① 한글로 정리된 자료, ② 요약/목차 + 파일첨부, ③ 정보제공기관 링크

마지막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RICON의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았다. RICON은 2019년 12월부터 홈페이지의 '동향 & 이슈'를 통해 해외정보를 '정책'과 '시장', '칼럼'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월까지 '정책'정보 총 28건, '시장'정보 총 73건, '칼럼'정보 총 43건이 게시되어 있다. '정책'과 '칼럼'은 다양한 주제와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 정보에서는 일본과 영국, 베트남의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지역이나 우즈베키스탄의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와 원자재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의 시사점과 RICON의 글로벌 건설정보 제공현황을 바탕으로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첫째, 건설제도에 대한 글로벌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선진국 건설제도와 개도국 건설제도 정보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 셋째, 유관기관에서 제공되는 건설제도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넷째, 글로벌 건설제도의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정보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섯째, 전문건설업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 사업이 도입되어야 한다.
- 여섯째, 플랫폼 형태의 정보 제공 및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일곱째, RICON의 '해외 동향과 이슈'의 정보제공 분류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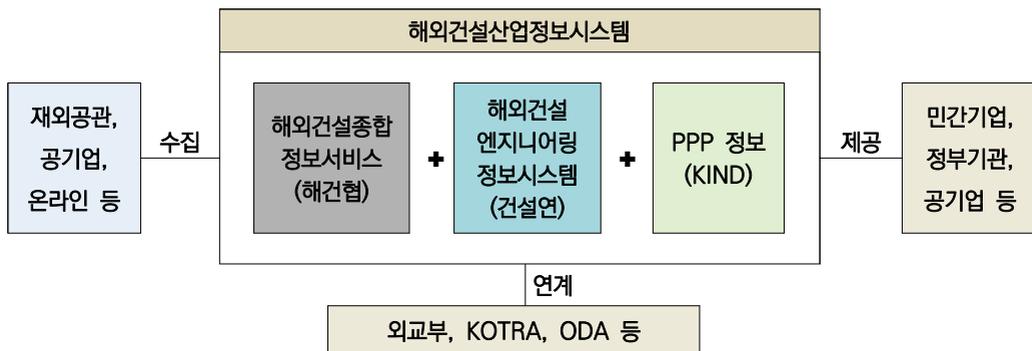
2. 연구의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해 보완사항 및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주요 자문의견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설기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구축되는 정보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의 구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인 해외건설협회의 담당자 면담조사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RICON의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추진배경은 흩어져 있는 해외

건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정보제공 및 분석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7년 국정과제(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로 선정되어 시작되었고, 2018년 4월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수행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의 1차 구축이 이루어졌고, 현재 2차 구축단계 중이다. 한편, 2021년 11월에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1차년도는 구축 DB의 안정화 단계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해건협), 해외건설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OVICE, 건설연)의 정보를 통합하고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다. 또한 KIND와 해건협 등의 투자개발형사업 정보의 DB를 구축하고 1차년도 통합구축 정보 마이그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축된 정보 내용은 시장 정보, 사업정보, 국별환경, 진출지원, 수주통계, 정보마당, 네트워크, 입문정보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건설제도 정보는 국별환경에 포함될 예정이다. 2차년도는 신규 구축사업단 계로 주요 기관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모바일 앱 개발, ONE PAGE 서비스 개발, DB 확대 구축, 정부지원사업 통합안내 구축, 인재정보 개발, 오픈질의응답 게시판 개발 등이다. 2022년도 상반기에 1차년도 결과인 해외건설산업 통합DB(해외건설+ENG+PPP 정보)가 대외 서비스로 개통될 계획이다. 2023년 상반기까지는 KOTRA 등 유관기관 연계 정보의 구축과 모바일 등 서비스를 통합 구축한 후 안정화기간(3~6개월)을 거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자료 : 해외건설협회(202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그림 5-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의 구성



자료 : 해외건설협회(202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그림 5-2]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의 목표 서비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의 확정된 정보제공 구조는 서비스의 개통이 이루어진 후 확 인될 수 있으나 해외건설협회(2021)⁴⁾에 따르면 ‘국가별 환경정보 제공기능 개발(3)’에서 ‘지역/국가별 법규/제도 정보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지역/국가별 법규 및 제도 정보를 면허 및 허가제도, 지사·법인설치, 도급한도/ 등급, 입찰, 보증, 보 험, 사업관리, HSE, 조세제도, 노무제도, 출입국관리, 관세, 통관, 금융, 부동산개발, PPP 제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건설통합정보서 비스”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정보제공 구조를 기반으로 OVICE와 KIND의 PPP 정보 통합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추가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 비스”가 개통되면 기존의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와 건 설기술연구원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등 중복되는 건설정보서비스는 폐지될 계획이다.

4) 해외건설협회(2021)의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로 시스템 구축사업의 개요와 세 부적인 제안 요청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5-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의 '지역/국가별 법규/제도 정보 제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국가별 환경정보 제공기능 개발(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사용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지역/국가별 법규/제도 정보 제공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국가별 법규/제도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국가별 법규 및 제도 정보를 면허 및 허가제도, 지사·법인설치, 도급한도/ 등급, 입찰, 보증, 보험, 사업관리, HSE, 조세제도, 노무제도, 출입국관리, 관세, 통관, 금융, 부동산개발, PPP제도로 구분하여 제공 -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출력내용 및 형태 변경 가능 ○ 국가정보 검색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기능으로 1)지역, 2)국가 등을 AND / OR 조건으로 검색함 ○ SNS, 프린터,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현업요구사항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UI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자료 : 해외건설협회(202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본다. 연구의 시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제공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주요 선진국 건설제도의 벤치마킹이다. 또 하나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건설제도 정보의 지원이다. 본 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건설제도 분야별로 주요 선진국의 제도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분야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예로, 주요 선진국의 면허제도는 실적 위주의 평가를 통해 발주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구축을 통해 선진국의 건설제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는 글로벌 건설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건설제도를 선진화하는 정책을 마련 또는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건설기업이나 건설관련 협회·조합에서도 선진국의 건설제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앞으로의 건설제도 변화를 준비하고 제도개정을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에 내부조직을 갖추어 증장기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나 외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건설제도의 경우에 진출국가와 국내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는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건설제도의 제공과 더불어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건설업 맞춤형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과 같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건설제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운영되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나 ‘해외건설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의 통합과 더불어 다양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해외건설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담당자와의 인터뷰조사에서 현재 RICON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동향과 이슈’의 연계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폭넓은 해외건설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따라서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제공사업과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의 확보와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이용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글로벌 건설제도의 정보 구축 및 제공은 건설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건설제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내 제도와 해외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유효유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OECD 등 주요 해외국가 건설제도 벤치마킹 연구”의 1·2차 연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해외국가의 건설제도를 비교해보고, 해외건설제도의 정보제공현황을 분석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정보의 활용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가 개통된 후 해외건설제도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RICON의 글로벌 건설제도 정보 구축 및 제공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RICON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문헌자료

- 국토교통부(2019),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1~'25).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0), OECD 등 주요 해외국가 건설제도 벤치마킹 연구(1차년도).
- 법제처·한국법령정보원(2021), World Laws Information(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자료.
- 한국법제연구원(2021), 최신외국법제정보 발간 목록('07~'21).
- 해외건설협회(2021),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 인터넷자료

-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 홈페이지(www.ricon.re.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 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orld.moleg.go.kr/>).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ice.or.jp/>)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 홈페이지(<https://www.ovice.or.kr/>).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cak.or.kr/>).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https://www.koica.go.kr/>).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lri.re.kr/>).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홈페이지(<http://www.kindkorea.or.kr/>).

OECD 등 주요 해외국가 건설제도 벤치마킹 연구(2차년도)

2022년 4월 인쇄

2022년 4월 발행

발행인 유병권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2